



2009

중산층 위기시대의 복지패러다임과 정책과제

Welfare Paradigm and Policy Agenda in the Time of
Middle Class Crisis

김 경 혜 · 조 달 호 · 박 은 철

Welfare Paradigm and Policy Agenda in the Time of Middle Class Crisis

2009

■ 연구진 ■

김 경 혜 •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조 달 호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박 은 철 •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서 은 정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1) 연구 배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으로 중산층 붕괴가 시작되었음.
 -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 중산층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중·장년의 금융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KDI 분석결과 중산층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68.5%에서 2000년 58.5%로 10% 포인트 감소하였고, 이중 7%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안전망은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와 정규직 근로자 위주 사회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산층의 빈곤예방과 탈빈곤 지원에 제한적임.
 - 경제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중산층의 몰락을 방지하는 효과는 미미함.
 -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정부가 발표한 “신빈곤층 대책”도 사업 대상을 다소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중산층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함.
-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작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 중산층의 붕괴는 세계적인 추세로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산층의 붕괴는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성장 동력 기반의 붕괴로 경기침체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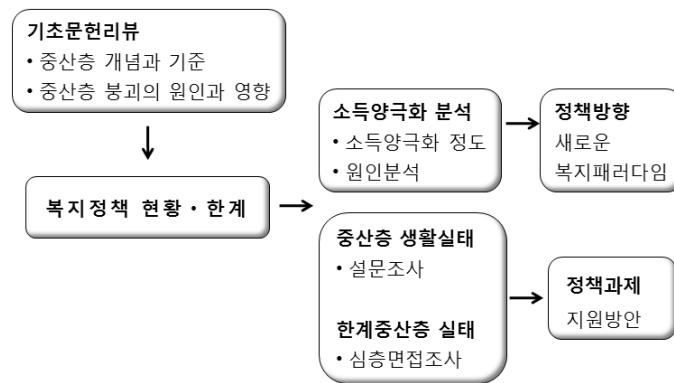
2) 연구목적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 중산층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주어짐.

3) 연구내용

○이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 체계는 <그림 1>과 같음.

- 제1장과 제2장에서 중산층에 대한 선행연구와 우리의 복지정책 현황 등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함.
- 제3장에서는 소득양극화 지수를 추정하고 소득양극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복지 패러다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중산층의 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제4장에서는 서울시 중산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5장에서는 한계중산층 대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복지정책 방향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 1>

4) 연구방법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분석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 소득양극화 지수인 Wolfson지수와 ER지수를 산출하고, 소득양극화 결정모형을 분석하였음.

○설문조사

-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서울시 중산층 가구의 생활변화와 문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중산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은 월평균소득이 150~450만원인 가구이며,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됨.

○심층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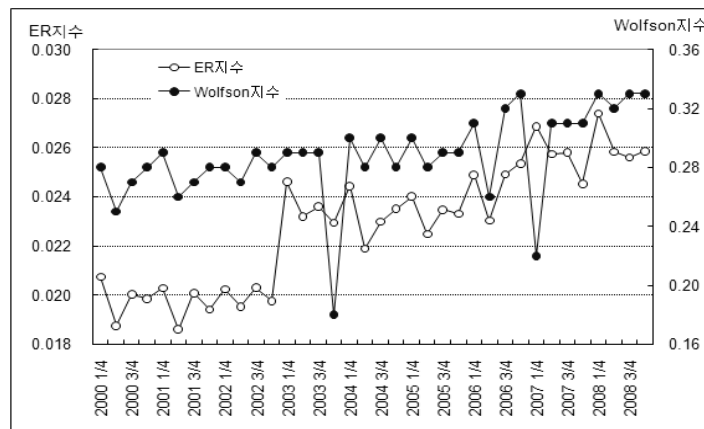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탈락한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심층면접조사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1) 서울시 소득양극화 실태와 원인

○서울의 소득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악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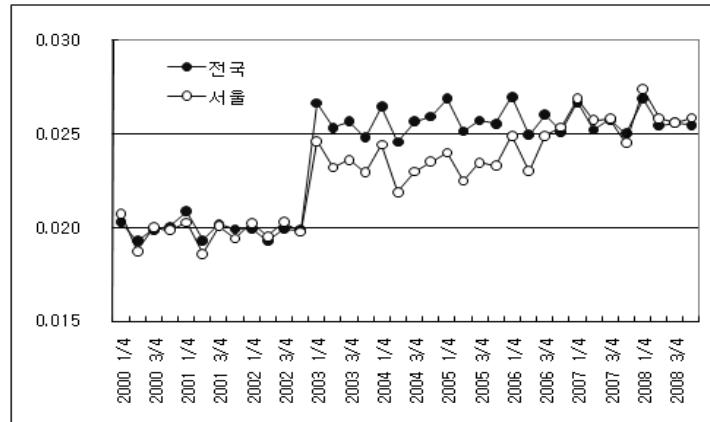
- 서울시 중산층 비중은 2000년 67.8%에서 2008년 59.4%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빈곤층은 10.9%에서 16.6%로 증가함.
- 2000~2008년 사이 소득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Wolfson지수와 ER지수가 모두 상승함.



< 2>

○서울의 소득양극화는 대체로 전국과 유사한 추세임.

- 2003년 이전까지 서울과 전국의 양극화 지수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나, 2003년 1/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는 전국의 소득양극화 수준이 서울보다 심각함.
- 그러나 2008년 4/4분기 서울의 ER지수는 0.0259로 전국 평균 0.0255보다 다소 높음.



< 3>

(ER)

- 서울의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업률과 임시직비율임.
- ER지수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소득양극화 지수는 0.4% 증가하고, 임시직 비율이 1% 상승하면 소득양극화 지수는 1.1% 감소함.
- 임시직 비율의 증가가 소득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은 새로운 임시직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어 근로빈곤층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줄 때 소득양극화가 완화됨을 시사함.

2) 서울시 중산층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실업이나 고용환경 변화는 적은 편임.
- 설문조사 결과 가구주의 94.9%가 현재 취업 중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업상태로 전락하거나 고용조건이 악화된 경우는 많지 않음.
- 이는 지난해 금융위기 후에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임.
-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이 감소하여 가구 경제 상태는 악화됨.
- 31.1%가 금융위기 후 가구수입이 감소하였고, 39.5%가 수입이 지출보다 적어 적자재정을 경험함.
- 31.8%는 은행이나 친지에게 또는 사채를 빌려 부채를 졌다고 응답하였으며, 8.6%는 저축이나 보험 등을 해약하였음.
- 54.1%는 이전보다 생활비를 줄였으며, 지출을 줄인 항목은 외식비, 식료품비, 사교육비 순임.

< 1> 가

(: %)

가		150~200	200~300	300~400	400~450
가	31.1	39.5	33.6	26.5	27.7
	54.1	57.8	61.5	51.0	46.4
가	39.5	54.1	47.0	35.1	24.7

○ 학업이나 결혼 등 기초생활과 사회·문화생활에도 영향을 받음.

- 경제적 이유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한 가족이 있는 경우가 2.6%이고, 결혼·출산 등을 미루거나 포기한 경우도 1.2%임.
-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한 비율은 평균 5.9%이고,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은 11.9%로 높은 편임.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 중 고령자 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은 사회·문화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함.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외식이나 취미활동, 여행, 사회활동 등 문화생활 향유가 모든 계층에서 크게 감소함.

< 2>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2.6	4.3	3.9	1.0	1.7
,	1.2	2.2	1.8	0.7	0.4
	5.9	11.9	8.8	3.0	1.3

< 3> .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67.2	67.6	68.6	66.6	66.0
,	59.1	58.4	64.3	59.6	52.8
	61.0	61.6	62.5	61.3	58.3
	46.8	51.9	53.0	47.0	34.9

○경제적 문제로 가족관계도 악화됨.

－금융위기 이후 가족 간의 대화가 감소한 경우가 12.6%, 다툼이 늘어난 경우가 10.1%, 이혼이나 자살을 고려해 본 경험은 각각 5.5%와 4.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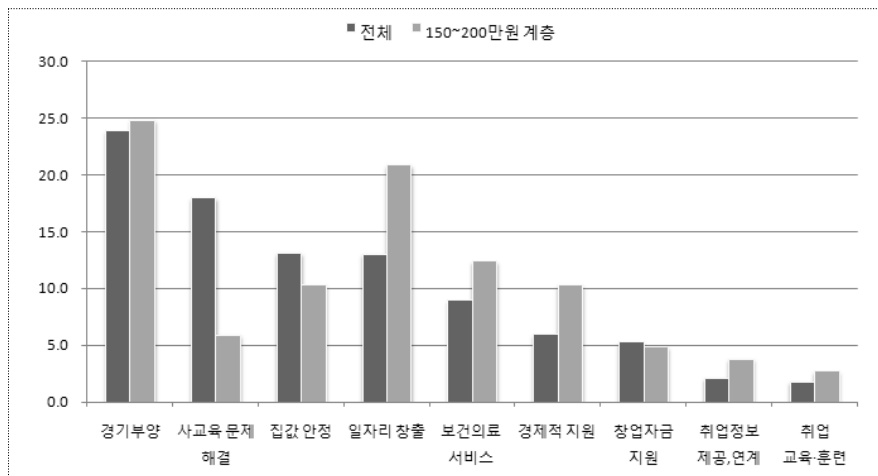
< 4> 가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가	12.6	17.3	16.3	8.3	10.2
가 가	10.1	16.2	12.4	6.6	7.2
	5.5	7.6	8.5	3.3	3.0
가 가	1.9	2.7	2.1	1.3	1.7
	4.4	8.1	6.0	1.7	3.0

○필요한 복지욕구 우선순위는 경기부양, 사교육문제 해결, 집값안정, 일자리 창출 순임.

－중하계층은 사교육비나 집값보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욕구가 우선순위임.



< 4>

3) 한계중산층 심층인터뷰 결과

○조사대상가구의 경제상태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가구주의 실직과 사업 부진임.

－가구주의 실직으로 많은 가구가 경제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저소득·빈곤층으로 추락하였음.

- 여성의 경우 이혼 또는 사별 등이 경제상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질병이나 사고 등 개인적인 문제도 경제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침.
- 대부분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려워진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문제 상황에 놓여있었음.
- 대부분 취업이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창업이나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음.
 - 한계중산층의 탈빈곤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임.
 - 그러나 자녀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부담이 이들의 재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계부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탈빈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1) 복지패러다임의 전환

- 중산층 위기 상황에서는 소득양극화 관리가 필요함.
 - 소득불균등과 소득양극화는 유사한 추이로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 그러나 두 지표는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정책방향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 소득불균등 관점은 소득격차와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해결이 핵심적 과제인 반면, 소득양극화는 중간계층의 해체가 주요 문제로, 중산층의 유지·복원이 정책적 관심임.
 - 따라서 중산층 위기시대에는 소득양극화 동향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중산층은 미래성장의 동력이고 사회갈등의 완충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계층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임.
 - 국가의 복지지출이 커지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산층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각과는 달리, 보편적 복지패러다임을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에서 중산층이 가장 두텁고 사회경제적 효과도 가장 우수함.

- 중산층에게는 노동을 장려하고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대의 사회안전망임.
- 소득불균등은 빈곤층 대상 소득재분배가 목표이기 때문에 공공부조사업을 통한 소득이전이 주요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중산층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일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주요 문제임. 따라서 중산층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핵심임.
- 설문조사에서도 중산층이 가장 원하는 욕구우선순위는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순이었음.

2) 중산층 종합대책

(1)

- 중산층 종합대책의 정책목표는 i) 중산층 탈락방지 또는 유지와 ii) 탈빈곤 또는 중산층 복원임.
- 이를 위해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 또는 Wolfson지수)를 주기적으로 추정하여, 중산층의 붕괴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정책지표로 활용함.
- 중산층의 유지·복원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중산층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분야는 경제, 노동, 교육, 사회, 복지분야 등 다양함.
- 다양한 행정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중산층 종합대책인 휴먼뉴딜 정책과 같이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산층 문제를 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고 종합적 대응 로드맵을 작성해야 함.
- 또한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총괄 헤드쿼터가 필요함. 중산층 대책은 고용·교육분야 업무가 핵심이고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전제조건이므로 시장실 직속 TF팀을 구성하거나 서울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임.

(2)

- 경기부양을 통한 실업률 감소
- 2008년 4/4분기 기준 서울의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는 0.0259로 전국의 ER지수 0.0255를 상회함. 서울의 양극화 지수를 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2009년 9월 현재 실업률 4.3%를 4.09%까지 낮추어야 함.
- 서울의 실업률을 4.09%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선결과제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위적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위기 충격을 완화하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임시직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함.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중산층 대책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 훈련을 동반한 고용정책임.
- 세계화와 경제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평생직장개념은 사라지고 있음. 이로 인해 모든 계층에서 전업과 재취업이 필요함. 중산층도 언제라도 전업, 재취업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도록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함.

○사회·문화적 지원

-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 위기상황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이는 가정해체, 건강문제, 주거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결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정서적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문화적 지원이 필요함.

3) 한계중산층 지원방안

○접근방법의 차별화

- 중산층 내에서도 핵심중산층과 한계중산층은 다른 접근이 필요함. 핵심중산층은 비교적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고, 고용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므로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여 안정적 중산층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목표임.
- 반면에 한계중산층은 근로빈곤층과 유사한 특성을 보임. 현재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교육과 기술수준이 낮아 고용조건이 열악하고 실업상태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빈곤층으로의 탈락방지와 함께 좀 더 안정적인 핵심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직업교육 지원

- 한계중산층은 학력과 기술이 낮기 때문에 특히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핵심중산층으로 상향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재취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함.
- 한계중산층의 경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재직자들도 좀 더 나

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

○가계부담 경감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에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가계부담이 빈곤층으로 탈락하는 원인이 되거나 재기·재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중산층 지원대책은 노동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한계중산층은 근로 빈곤층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하는 가계부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조도 필요함.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 교육과 기술수준이 낮은 한계중산층에게는 취업보다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임. 이러한 점에서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서울시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의의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 희망드림 프로젝트 수혜대상 기준인 최저생계비 150%를 1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한계중산층(중위소득의 50~70%)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설문조사 결과, 한계중산층에서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이용욕구가 매우 높음.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 한계중산층의 이용희망율을 적용하면 주요 희망드림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표 5>와 같음.

< 표 5 >

(단위: 가, %)

	가	가		가	
			가		가
	4,098,562	11.07	453,711	24.3	110,251
				17.8	80,760
				17.3	78,492

단위: 가 2008 .

목 차

1		3
1		3
1.		3
2.		4
3.		6
2		7
1.		7
2.		9
2		15
1		15
1.		15
2.		17
3.		19
2		23
1.		23
2.		26
3.		30
3		37
1		37
1.		37
2.		38
3.		43
2		46
1.		46
2.		48
3.		54

4		59
1		59
1.		59
2.		59
3.		60
4.		61
2		62
1. 가		62
2.		64
3. 가		70
4.		75
5.		78
6.		80
7.		84
5		91
1		91
1.		91
2.		91
3.		93
2		94
1.		94
2.		95
3.		105
4.		111
5.		118
3		124
1.		124
2.		125

6		133
1		133
1.		133
2.		135
3.		141
2		145
1.		145
2.		146
		151
		157
		167

표 목 차

< 1-1>		10
< 1-2>		11
< 1-3> 1998~2004		11
< 1-4> (I)		11
< 1-5> (II)		11
< 2-1>		16
< 2-2> 가 가		17
< 2-3> 가 , ,		18
< 2-4> 2009		21
< 2-5>		22
< 2-6>		22
< 2-7> 가		24
< 2-8>		25
< 2-9>		27
< 2-10>		28
< 2-11> 2009		29
< 2-12>		30
< 2-13> 2009		31
< 2-14>		31
< 2-15>		32
< 2-16>		34
< 2-17>		34
< 3-1>		37
< 3-2>		40
< 3-3>		49
< 3-4>		50
< 3-5> 가 R^2 가		52
< 3-6>		52

< 4-1>		60
< 4-2>		61
< 4-3>		62
< 4-4>		63
< 4-5>	가	63
< 4-6>	가	64
< 4-7>	가	64
< 4-8>	가	65
< 4-9>	가	65
< 4-10>	가	66
< 4-11>	가	67
< 4-12>	가	67
< 4-13>	가	68
< 4-14>	가	69
< 4-15>		69
< 4-16>		70
< 4-17>	가	71
< 4-18>	가	72
< 4-19>	가	72
< 4-20>	가	73
< 4-21>		74
< 4-22>		74
< 4-23>		75
< 4-24>		75
< 4-25>		76
< 4-26>		76
< 4-27>	가	77
< 4-28>		78
< 4-29>		79

< 4-30>		79
< 4-31>		79
< 4-32>		80
< 4-33>		81
< 4-34> 가		81
< 4-35>		82
< 4-36> 가 가		82
< 4-37>		83
< 4-38>		84
< 5-1>		92
< 5-2>		93
< 5-3>		94
< 5-4> 가		94
< 5-5>		95
< 5-6>		119
< 5-7>		125
< 5-8> I		126
< 5-9> II		127
< 5-10>		128
< 5-11>		128
< 6-1>		144
< 6-2>		144

그림 목 차

< 1-1>		5
< 2-1>	(GDP %)	20
< 2-2>		20
< 2-3>		25
< 2-4>		26
< 3-1>	Wolfson	41
< 3-2>		43
< 3-3>	(ER)	44
< 3-4>		45
< 3-5>		46
< 3-6>	ER	53
< 3-7>	ER	53
< 3-8>	()	55
< 3-9>	()	55
< 4-1>		83
< 4-2>		86
< 4-3>		87
< 6-1>		141
< 6-2>		14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중산층 연구동향

제1절 연구개요

1.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중반 근대화 초기였다. 당시 한국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중간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던 자영업자, 자영농 등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논의과정에서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홍두승, 2008). 이후 산업화를 통해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산층도 함께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서 언론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위기”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외환위기는 중산층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 대규모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 중산층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중·장년의 금융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산층의 붕괴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중산층의 감소는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장동력 기반의 붕괴로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특히 중산층에서 탈락한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KDI 분석자료에 따르면 IMF 이전인 1996년 68.5%였던 중산층 구성비가 2007년 58%로 10%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이 중 7%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전통적 빈곤층 외에 근로빈곤층, 신용불량자와 노숙자 등과 같이 사회적 배제로 인한 새로운 빈곤층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산층도 더 이상 경제적으로 보장된 계층이 아니며 노동자 계층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 몰락” 혹은 “중산층 위기”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안전망은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와 정규직 근로자 위주의 사회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제위기 시 중산층의 빈곤예방과 탈빈곤 지원에 제한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그 지원 대상을 늘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중산층의 몰락을 방지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그나마 지난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산층의 몰락이 다시 이슈화되면서 정부는 신빈곤층 대책, 휴먼뉴딜 정책 등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 사회가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중추가 되는 중산층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외환위기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산층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몰락을 방지하고 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

중산층의 붕괴는 세계화 경향,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 도입, 글로벌 경기침체 등 거시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해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산층에서 탈락한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 결과가 가정해체, 자녀양육, 건강, 주거 등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이처럼 중산층 문제는 경제적 접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제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 중산층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이 연구는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개요에 이어 중산층의 개념과 기준, 중산층 붕괴의 실태와 영향 등 선행 연구동향을 검토하였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패러다임 특성, 사회안전망 실태와 한계 등이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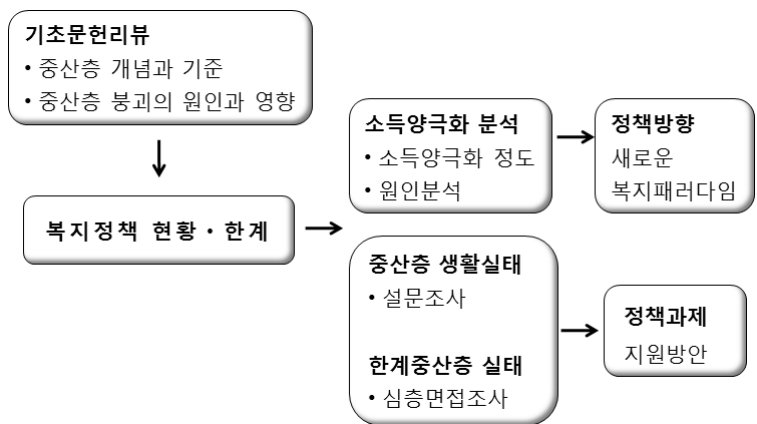
제3장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서울시 중산층의 변화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국가단위로 중산층 규모의 변화추이 또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서울시를 단위로 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 중산층 규모의 변화, 소득양극화 지수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산층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양극화 지수를 이용하여 중산층 붕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였

다. 소득양극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향후의 정책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장에서는 서울시 중산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였다. 중산층 붕괴는 외환위기 이후 줄곧 논의되었지만,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중산층의 생활실태, 금융위기 이후 생활변화 및 문제 등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등을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계중산층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계중산층은 공식적 용어가 아니고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은 중하층을 한계중산층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 중에서도 특히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은 한계중산층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의 설문조사는 현재의 중산층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제5장의 심층면접조사는 중산층 중에서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거나 이미 전락한 한계중산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제와 욕구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거시적, 미시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의 복지패러다임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연구내용의 구성 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 1-1>

3.

1)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분석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서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산층 구성비의 변화를 통해 중산층이 실제로 붕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득양극화 지수를 산출하여 중산층 붕괴정도를 확인하였다. 소득양극화 지수로는 Wolfson지수와 ER지수를 사용하였다.

2) 설문조사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서울시 중산층 가구의 생활변화와 문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산층은 소득이 서울시 중위소득의 50~150%인 집단으로 정의하고, 설문조사 대상은 이 기준에 해당되는 월평균소득 150~450만원인 가구로 하였다. 조사규모는 1,000가구이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가구 및 주거상황, 경제활동, 경제상태, 생활변화 및 의식, 복지정책 및 욕구 등이며, 조사는 2009년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3)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는 전체적인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부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실제적인 문제 확인을 시도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목적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요인과 당면문제는 이미 이를 경험한 집단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심층면접조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탈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대상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 센터, 사회연대은행, 지역자활센터 등 일자리 지원기관을 통해 일차 섭외하였고, snow-balling 방법으로 추가 인터뷰 대상을 확보하였다. 조사내용은 경제, 가족상태, 복지욕구 등이며 연구진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2인 1조로 면접대상자별 인터뷰를 2회 실시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완료하였다.

제2절 중산층 연구동향

1.

1) 중산층의 개념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채 중간층, 중간계층, 중류층, 중간계급 등 여러 가지 유사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당시의 중산층은 자영업주와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중산층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주로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사회학계에서는 중산층을 유사한 생활양식과 수준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한완상 외(1987)는 한국에서의 중산층을 소득, 주택, 교육수준, 직업 등을 종합해서 중간적 생활양식을 지닌 집단으로, 신광영(2004)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하여 경제생활이 안정되고, 노동자·농민들의 수준을 훨씬 넘는 여가 및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집단으로 정의하였다. 홍두승(2008)도 한국에서의 중산층을 생활양식,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을 공유하는 지위집단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은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건을 구비하였으며 체면치레할 정도의 교제도 하고 자녀를 대학에도 보내며 필요한 만큼의 문화생활도 하는 집단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문숙재 외, 2000). 그러나 중산층의 의미와 범위는 시기별, 학문분야별, 연구목적별로 다양하다. 정치학계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집단 간 갈등을 완충하는 집단으로서의 중산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및 정책연구기관들의 연구에서는 경제극복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중산층을 중간소득계층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중산층 위기’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먼저 사용한 저널리즘 용어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안정적 소비수준을 유지하던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언론에서 이를 ‘중산층 위기’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중산층 위기는 계급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집단이 생활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신광영(2004)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던 중간계급이 경제위기로 노동자 계급과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불확실한 미래를 맞게 되면서 그동안 누리던 프리미엄이 악화되는 현상을 중산층 위기라고 보았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중

산층만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을 포함해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중산층도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위기가 더 부각되었다. 중산층 위기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사실과 더불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줄어드는 “희망의 위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신광영, 2008).

2) 중산층 기준과 범위

(1)

중산층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을 구분 짓는 기준 또한 다양하다. 중산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이 있다.

객관적 기준은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지표와 교육수준, 직업, 생활양식과 같은 사회·문화적 지표로 구성된다. 연구주체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은 1985년 중산층의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배 이상, 자기 집이 있거나 최소한 독채 전세에 거주, 고용 지위가 상용직 또는 자영업주, 고졸 이상의 학력 등을 제시하였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아파트 기준 30평 전세 이상 거주, 자가용 보유, 안정된 직장, 고학력, 외식 등 문화 여가생활 향유 등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하였다(경향신문, 2005.10.5). 최근의 연구자 중에서는 홍두승(2005)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0% 이상인 가구소득, 자가 20평 또는 전월세 30평 이상 거주,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중산층 기준으로 보았으며, 조동기(2008)는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거주 주택규모 30평 이상, 2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OECD, 삼성경제연구소(2006), KDI(유경준·최바울, 2008) 등은 경제적 기준만 고려하여 가구소득이 해당 집단 중위소득의 50~150%인 집단을 중산층으로 간주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에 대한 관심은 경제극복이라는 정책적 관심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부 및 민간의 경제연구소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연구에서 중산층은 주로 중간소득계층으로 간주되었다. 이 연구도 경제위기와 관련된 문제가 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에 소득기준, 즉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인 경우를 중산층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기준은 본인 스스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귀속의식에 따라 중산층 여부를 구분 짓는 것이다. 중간층으로의 주관적 인식이 실체적 의미의 중산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자신을 중간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기준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귀속의식도 의의가 있다(홍두승, 2008).

(2)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절대적 중산층과 상대적 중산층으로 구분이 된다. 절대적 중산층이란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설정된 개념으로, 앞서 경제기획원의 기준인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배 이상’과 같은 절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반면, 상대적 중산층이란 상대적 비교를 통해 중산층을 구분 지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중산층의 범주를 중위소득의 50~150%로 간주하는 것은 상대적 기준이다. 주관적 귀속의식 또한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 중산층 범주에 해당된다.

사용하는 개념도 연구주제 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르다. 사회 전체적으로 중산층의 규모를 늘려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 ‘절대적 중산층’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반면, 계층 간 격차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상대적 중산층 개념이 강조된다.

(3)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중산층이 핵심중산층(중상+중중층)이라면,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저소득층을 한계중산층(중하+하상층)이라고 한다(중앙일보, 2008.12.15). 최근에 중산층의 위기를 논의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산층이다. 이처럼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집단을 한계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술적 용어가 아닌 조작적 개념이고, 상중하 구분도 연구자에 따라 가변적이다.

2.

1) 중산층 감소 실태

여러 선행연구에서 중산층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DI가 통계청의 「가구 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준·최바울, 2008).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의 비중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10%가 감소하였고, 감소한 10% 가운데 약 7%는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같은 기간 동안 빈곤층의 비율은 11.3%에서 17.9%로 증가하였다. 소득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W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0.2388에서 0.2941로 증가하였으며, 소득불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0.2981에서 0.3397로 증가하여 소득양극화와 불균등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 1-1>

		1996		2000		2006	
			가		가		가
가 (%)		11.76	11.25	17.39	15.74	21.23	7.94
		68.00	68.45	58.86	61.88	53.63	58.48
		20.24	20.30	23.75	22.38	25.14	23.59
(%)	20%	7.62	7.91	5.45	6.21	4.22	5.65
	60%	54.41	54.25	51.47	51.62	54.35	54.74
	20%	37.97	37.84	43.08	42.17	41.43	39.61
Index	5	4.98	4.79	7.90	6.79	9.80	7.02
		0.3020	0.2981	0.3739	0.3576	0.3716	0.3397
	W	0.2397	0.2388	0.2980	0.2799	0.3231	0.2941

: , 2008, “ ”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산층의 규모변화를 추정한 남준우(2007)의 연구에서도 중산층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산층(중위소득의 75~150%)의 비중은 1998년 42.3%에서 2004년 40.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빈곤층도 34.3%에서 33.2%로 감소하고 상위층은 23.4%에서 26.0%로 증가하여, 빈곤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KDI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이동하였음이 확인되었다. 1998~2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전이확률을 분석한 결과, 기준시점인 1998년도에 중산층이었던 집단 중 64.5%는 그대로 중산층에 잔류한 반면, 21.3%는 하위층, 14.2%는 상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 중 60%가 하위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가구주가 여성이고 학력이 낮으며, 자영업인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2>

(: %)

	1998	2000	2002	2004
	34.3	32.8	31.8	33.2
	42.3	43.7	43.0	40.7
	23.4	23.5	25.2	26.0

: , 2007

< 1-3> 1998~2004

	0.626	0.321	0.052
	0.213	0.645	0.142
	0.062	0.282	0.657

: , 2007

한편, 주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도 감소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기준 1999년 54.9%에서 2006년 53.4%로 감소하였다. 서울시민의 경우도 1999년 57.4%에서 2003년 58.4%로 1% 상승하였다가 2006년 54.2%로 감소하였다. 한편, 중앙일보가 2005년과 2008년에 실시한 주관적 계층의식조사에서 중층과 하층의 경계에 있는 한계중산층(중하층+하상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핵심중산층(중상+중중)은 2005년 39.1%에서 2006년 36.3%로 감소한 반면, 한계중산층은 27.8%에서 35.3%로 증가하였다(중앙일보, 2008.12.15).

< 1-4>

(I)

(: %)

	1999	2003	2006
	1.1	1.4	1.5
	54.9	56.2	53.4
	44.0	42.4	45.2
	1.5	2.0	2.1
	57.4	58.4	54.2
	41.1	39.5	43.8

: , ,

< 1-5>

(II)

(: %)

	2005	2008
	6.5	6.9
	32.6	29.4
()	(39.1)	(36.3)
	16.4	21.0
	11.4	14.3
()	(27.8)	(35.3)

: , 2008.12.15

2) 중산층 감소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위기’와 함께 ‘중산층 붕괴’, ‘중산층 몰락’, ‘중산층 쇠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산층 붕괴, 쇠퇴 등은 중산층의 규모 감소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양극화, 특히 소득양극화 개념과 연결된다. 소득양극화란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양극화는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은 늘어난 반면, 부유층은 더 부유하게 되는 불평등 심화와 빈곤층 확대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빈곤계층의 증가와 부익부

빈익빈 심화는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의 축적에 실패하거나 소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이 많아지면 사회나 정치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또한 계층 간 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교육기회의 불균형 심화로 부나 가난을 세습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의 기반이 되는 중산층의 붕괴는 성장기반 붕괴로 이어져 경제침체 악순환도 초래한다. 중산층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핵심적 주체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쇠퇴하면 구매력이 감소하여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생산이 위축되는 경기침체가 지속된다(신동면, 2006).

중산층의 구조변동은 정치적 성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산층은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이 혼재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선택이 사회변화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중산층 쇠퇴를 가져온 세계화와 양극화의 충격은 경제적으로 서구사회에 대한 비서구사회의 의존을 강화시키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서구사회 의존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진보주의에 유리한 토양을 제공한다. 또한 중산층 내부적으로는 성장주의 대 분배주의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대립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김호기, 2008).

제2장 복지정책의 현황과 한계

제1절 복지체계 유형과 중산층

제2절 사회안전망 현황과 한계

제 2 장

복지정책의 현황과 한계

제1절 복지체제 유형과 중산층

1.

한 사회의 복지체제는 복지정책의 지향과 구성, 그리고 접근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복지체제 유형별로 나타나는 차이 가운데, 이 연구의 관심대상인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한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 내지는 정책방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중산층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는 곧 중산층의 규모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복지체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나,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유형화는 Esping-Andersen에 의해 이루어진 복지국가 3체제론이다. Esping-Andersen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정도와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conservative corporatist welfare state), 사회민주적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가지 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복지를 시장경제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복지보다는 시장에서의 노동과 노동시장의 일차적 분배를 통해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시장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복지기능은 최소화하여 시장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사회복지의 제도화도 정부보다는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복지체제에서 복지정책의 주요 목표는 빈곤해결이기 때문에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사업이 핵심적인 사회복지제도이다. 공공부조

의 대상은 소득·자산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국가에서 중산층은 복지수혜대상이 아니며 보편적 복지프로그램도 발달되어 있지 않다.

< 2-1>

		가	가	가
			가	
			()	()
	()	GDP 15%	GDP 30%	GDP 30%
		4%	1.5%	3%
		3-4%	9-10%	5-6%

: , 2008

한편,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비해 민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지출 규모는 큰 편이다. 공공부조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사회보험이 중심이 되어 사회보장 기제가 작동하는 복지 체제이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노동을 통한 사회보험료가 복지재원의 근간이 되고 보험료 납부가 사회복지 수급권의 조건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주요 복지수혜집단이 된다. 또한 빈곤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획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보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교육보장은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주요 수혜그룹이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 혜택은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수주의적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통한 재분배 효과와 중간층의 규모는 세가지 유형 중 중간수준에 머문다. 특히 보수주의 국가의 노동시장은 각종 고용보험제도로 인해 진입과 퇴출이 어려운 경직성을 보이는데 이는 기존 노동자와 신규구직자 간의 격차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시장에 의한 복지 제공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사회복지 제공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3가지 유형 중 국가의 복지기능이 가장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국가재정부담도 가장 크다. 이는 보편주의의 원칙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평등수준을 추구하는 국가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외에도 각종 돌봄, 고용, 교육 등

중산층이 지니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진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은 사회복지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사회복지 생산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지닌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이 가장 큰 특징으로 국가는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고 있다.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일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도 있으나, 막대한 규모의 복지재원이 결국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

안상훈(2008)은 이상에서 설명한 Esping-Andersen의 3체제론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사회정책의 두 가지 분야인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의 상대적 구성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을 ‘공공부조형’, ‘사회보험형’, ‘사회서비스 통합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공공부조형은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가 모두 적은 유형인 반면, 사회보험형은 현금이전은 높으나 사회서비스는 적은 유형이고, 사회서비스통합형은 두가지 모두 높은 유형이다. Esping-Andersen의 3체제와 비교하면, 공공부조형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사회보험형은 보수적 조합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서비스 통합형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2-2> 가 가 (: %)

	가	가 (I)	가 (II)
:	:	52.7	75.8
	:	45.3	70.5
		43.9	66.5
:	:	39.4	62.5
	:	32.6	56.3
:	:	27.3	50.4

: 가 (1) = 가 75~125%
: 가 (2) = 가 75~200%
: , 2008

먼저 유형별 중산층 가구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 비중이 모두 낮은 ‘공공부조형’ 국가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가장 적은 반면, 현금이전과 사회서비스 두 분야가 모두 높은 ‘사회서비스 통합형’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부조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는 엄격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극빈층을 복지대상으로 한정하는 반면, 현금이전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공급도 활발한 사회서비스 통합형 국가는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전국민의 복지욕구를 국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안상훈(2008)은 또한 유럽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저항과 국민부담률, 그리고 지니계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국가일수록 국민의 조세저항은 낮고 소득불평등 정도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형 국가는 중산층이 최대 수혜계층이자 강력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가장 낮다. 또한 빈곤층도 공공부조와 함께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재분배 효과도 높아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다.

반면에 공공부조형 국가의 경우 국가의 역할은 극빈층 공공부조에 제한되고 노후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등은 민간에 맡기는 체제이다. 중산층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만 있고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지적 양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지출 비중이 낮고 조세부담률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 정도는 가장 높은 반면, 지니계수는 가장 높아 국가복지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가장 낮은 복지체제로 확인되었다.

사회보험형 국가의 경우 국가의 사회지출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현금급여에 집중되지만 기여에 따른 분배이라는 원칙 때문에 중산층의 지지를 받는다. 다만 노후, 장애, 실업과 같은 복지욕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수혜시점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복지적 태도 형성 정도가 사회서비스형 국가들만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조세저항, 국민부담률,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 정도가 모두 중간정도를 보인다.

< 2-3> 가 , ,

	0.05	0.06	0.65	0.77	44.83	0.26
	0.16	0.21	0.21	1.40	43.60	0.31
	0.07	0.14	0.14	2.19	30.55	0.34

: , 2008

일반적으로 국가의 복지기능이 커질수록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중산층이 줄어들다는 것이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표 2-1>, <표 2-2>, <표 2-3>을 종합할 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사회지출이 더 많고 복지수혜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복지의 범위를 넓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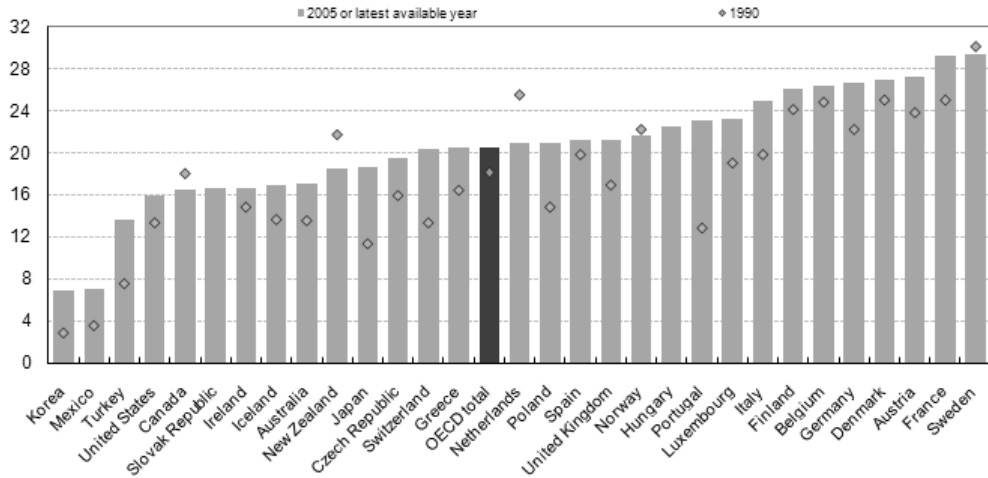
보는 복지체제에서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취약계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체제보다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주의 체제일수록 중산층의 비중이 크고, 중산층과 빈곤층의 연대가 활성화되어 사회통합적 재분배 효과도 크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이 보육·교육보장, 노동시장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전 국민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형 또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체제의 유지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예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복지체제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은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혼성사례로 파악될 수 있는데,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안상훈, 2008; 홍경준, 2005). 이 절에서는 사회지출과 정부의 재정구조 특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복지체제 특성을 살펴보았다. 국가의 사회지출 규모와 사업부문별 예산 구성비를 통해 정부의 복지에 대한 태도와 역점을 두는 복지제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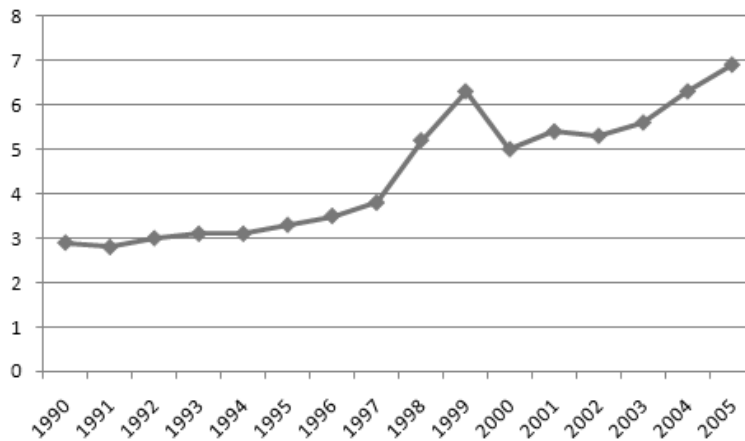
1) 사회지출 비중

OECD가 발표한 국가별 사회지출 비중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6.9%로 OECD 평균인 20.5%의 1/3 수준이다. 이는 30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사회지출 비중은 1990년 2.9%에서 IMF 이후인 1999년 6.3%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였다가 2005년 6.9%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2-1>에서 국가의 복지기능이 가장 약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15%선인 것과 비교해도 현재 우리의 국가 복지기능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결국 국가의 복지기능은 최소화하고 시장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보인다.



: OECD, OECD Factbook 2009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2-1> (GDP %)



: OECD, OECD Factbook 2009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2-2>

2) 복지예산 구조

복지정책이 어디에 역점을 두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예산구조를 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2009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총 20조 4,544억원으로 여기에는 노동, 주거복지 및 보훈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기초생활 보장 관련 예산이 7조 1,355억원으로 34.9%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크고,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8.9%, 노인, 여성, 아동 등 각 복지

대상 집단별 서비스에 투입된 예산은 28.4%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노인분야가 15.3%로 그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보육 8.4%이다.

< 2-4> 2009

		()	(%)	
				.
		7,135,490	34.9	38.9
		1,824,248	8.9	9.9
	가 ,	186,776	0.9	1.0
		1,710,430	8.4	9.3
	.	182,387	0.9	1.0
		3,125,882	15.3	17.0
	.	605,882	3.0	3.3
		370,147	1.8	2.0
		5,811,357	28.4	33.7
		3,193,260	15.6	17.4
		1,115,746	5.5	-
		1,004,148	4.9	-
		20,454,396	100.0	100.0

: , 「 ,

한편, 2009년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05년 12.3%보다 1.84배 증가한 것이다.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을 합쳐 2009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은 2조 9,126억원이며¹⁾, 사업대상별 예산 세부내역은 <표 2-5>와 같다. 전체 예산의 46.9%가 저소득층 대상 사업에 투입되었고, 특히 공공부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포함)에 전체 예산의 38.9%가 투입되었다. 저소득층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노인분야이며, 이어서 보육과 장애인 분야 순으로 예산 비중이 크다.

1) 이는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행정경비와 국고반환금, 기금적립 등 재정활동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을 포함한 것이다.

< 2-5>

		2005		2009	
		()	(%)	()	(%)
		607,758	40.9	1,132,854	38.9
	·	73,613	5.0	144,179	5.0
		61,779	4.2	90,175	3.1
	()	(743,150)	(50.0)	(1,367,208)	(46.9)
	/	20,992	1.4	346,596	11.9
		-		42,000	1.4
		158,182	10.7	153,969	5.3
		17,523	1.2	60,026	2.1
	()	(196,697)	(13.2)	(602,591)	(20.7)
		23,594	1.6	72,794	2.5
		181,679	12.2	243,243	8.4
	()	(205,273)	(13.8)	(316,036)	(10.9)
	·가	30,898	2.1	107,381	3.7
		207,358	14.0	395,297	13.6
·		101,793	6.9	124,121	4.3
		1,485,169	100.0	2,912,634	100.0

: , 「2005 」, 「2009 」

<표 2-5>의 서울시 복지예산 내역을 사업의 성격별로 재구성하면 <표 2-6>과 같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급여,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적 성격에 전체 복지예산의 47.3%가 투입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05년 48%와 큰 차이가 없다. 예산액 기준으로도 2005년 대비 91.5% 증가하여 전체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인 94.4%와 유사하다.

< 2-6>

(: %)

		2005		2005-2009 가
		2005	2009	
		41.4	39.7	
	·	5.0	5.1	
		1.6	2.6	
	()	(48.0)	(47.3)	91.5
	/	1.4	12.2	
		-	1.5	
	()	(1.4)	(13.6)	1751.2
		4.2	3.2	
		10.8	5.4	
		12.4	8.5	
	·가	2.1	3.8	
		14.1	13.9	
	·	6.9	4.4	
	()	(50.5)	(39.1)	50.2
		100.0	100.0	94.4

*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관련 예산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분담금 등이 있다. 사회보험 구성비는 2005년 1.4%에서 2009년 13.6%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로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액도 같은 기간 동안 17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분야로 구분되는 사업 예산액 구성비는 2005년 50.5%에서 2009년 39.1%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예산액의 증가율은 50.2%로 전체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시의 예산 중 복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속도도 가장 빨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사업내용의 성격별로 보면 서울시 복지예산은 여전히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에 역점을 두는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최근 들어 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제도가 소개되면서 사회보험관련 지출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보험의 역할이 확대되어, 서구 선진복지국가 유형별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지출의 증가는 사회서비스 예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총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구성비도 크게 감소하여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서울시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공공부조 예산은 유지한 채,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을 축소시킨 것이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업무는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중심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사업이 오히려 위축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더구나 아직도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대상이 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공부조 중심의 자유주의 복지체제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사회안전망 현황과 한계

1.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대체로 1990년대 이후 국가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고, 주요 사회안전망 체계들도 이 시점에 제정되거나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사회안전망은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와 정규직 근로자 위주의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져 경제위기 시 중

산층의 빈곤예방과 탈빈곤 지원에 제한이 있다.

현재 사회보험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보험 제도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2008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64.3%, 건강보험 65.6%, 고용보험 56.8%로 60% 전후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율이 낮아 40% 전후의 수준이다.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2-7>

가

(: %)

	2007. 8			2008. 8		
	1)2)	2)		1)2)	2)	
	63.2	64.4	55.3	64.3	65.6	56.8
	76.3	76.7	64.3	77.3	78.0	65.8
	40.0	42.5	39.2	39.0	41.5	39.2
	57.2	60.0	55.5	56.4	59.8	56.0
	59.3	62.7	57.6	62.6	66.5	62.3
	51.8	53.4	50.2	40.3	42.5	39.9
	3.3	4.0	3.7	6.4	6.1	6.3
	23.0	27.7	23.9	23.6	28.2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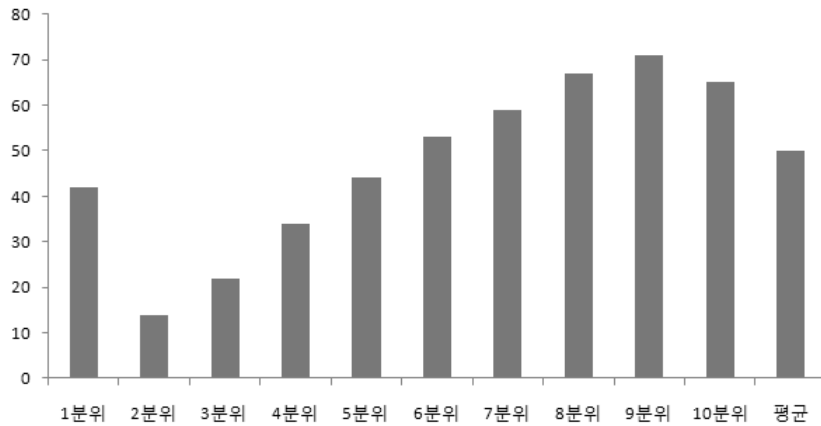
1:

2: 가 (가).

: , “ 가 ”, 2008. 10.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실직 시 사회안전망의 계층별 적용률이 한계중산층 집단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2~3분위 집단에서 실직을 당했을 때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되는 비율이 30% 정도로 가장 낮아 빈곤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참조).

한편, 공공부조의 경우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위기 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번 수급자가 되면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반면, 새로이 수급자가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급자의 계속수급률이 61.5%인 반면, 미국은 계속수급률 31.7%, 수급탈피율 48.1%로 수급자 변화가 유동적이다(<표 2-8> 참조).



: , 2009

< 2-3>

(2006)

< 2-8>

(: %)

	61.5	2.9	35.6
	31.7	20.2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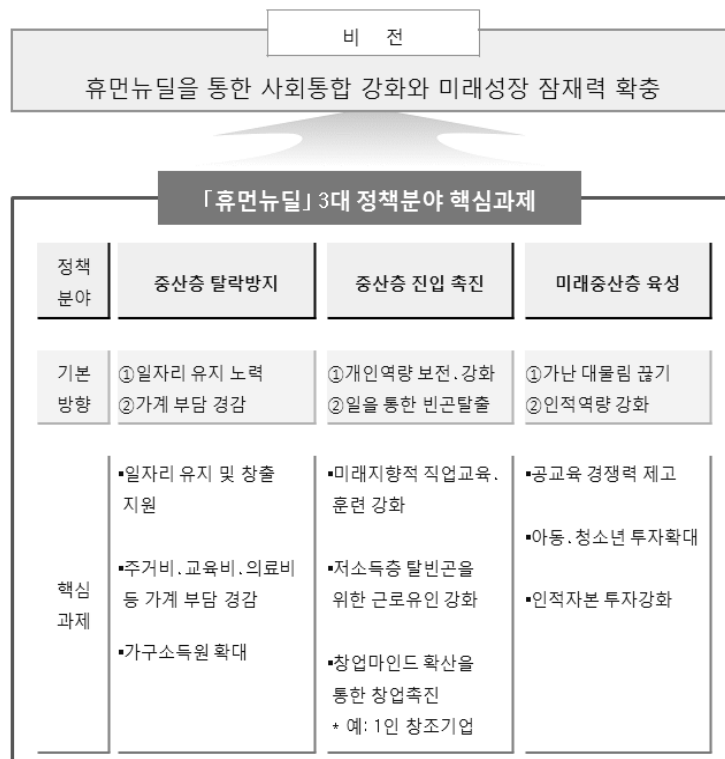
: , “ ”, 2009.3.23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소득은 없으나 자산이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절대빈곤층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서울시민의 1.8%인 179천명으로, 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의 34%에 불과하다. 결국 절대빈곤층의 66%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150% 수준까지 확대하여 보면 전체 인구의 9.2%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5).

2.

1) 서민·중산층 지원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특히 작년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서민·중산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8년 12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 대책을 발표하였고, 금년 3월에는 중산층 복원·유지를 위한 “중산층 살리기 휴먼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신빈곤층 대책과 휴먼뉴딜 정책은 정책대상을 기존의 수급자·차상위 가장 위주에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중산층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휴먼뉴딜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하여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모든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으로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 진입촉진, 미래중산층 육성 이라는 3가지 전략으로 접근한다. 휴먼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는 <그림 2-4>와 같다.



: , 2009

< 2-4>

그러나 “신빈곤층”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치 않고 부처 간 혼선이 있으며, 두 가지 대책이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기존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나마 작년말 발표된 내용 중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행된 것은 많지 않다.

정부는 지난 7월에는 신빈곤층 대책과 휴먼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6대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서민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8월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시작되고 한시적 혜택이 많으며 여전히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복원과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60.4%가 서민안정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49.4%),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의지가 부족하다’(30.5%)는 의견이 많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다(연합뉴스, 2009.9.1).

< 2-9>

	가 , 가 3000 , (85m ²)	2010
	300 , 40%	(2011)
	40% 120	()
	가 6 (10)	1
	1700 120 (EITC)	9
3	2 500	1
	1000	2
	(3 , 1 5000	
	18	
	·가 240	5
		2012
	· 가가	2011
	가	2011
8		
	5%	
	50%	
	5	
	7가 가가	
	1가 1	
		1

< 2-10>

			2009
		7~9	2009 6 30
			2009 6
	(→ 50%)	50%	2009 7
24	10	가	2009 7
		(0~4)	2009 9
		(0~4)	2009 11
	(1~1.5%p)	()	2009 2
	(20% → 30%)		2009 2
	(20 → 10%)		2009 7
	(10 → 5%)		2009 12
1	가 50% (1)	1	가 2009 7
2	(15% → 10%)	2	2009 6
2	(120 → 60)	2	2009 6
	(4 → 9 가)		2009 6
		5~14	2009 12
			2009 7
			2009 9
()	3% → 5%	3	가 2009 9
()	3% → 10%		
가		3	가 2009 8
	가		2009 7
		(0~4)	2009 7
			2009
			2009 7
			2009 9
			2009 7
			2009 7
	(50 → 72)		2009 7

: , “ ”, 2009.6.30

2) 일자리 창출

앞서 복지국가 유형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동정책과 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중산층의 붕괴 내지 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많은 중산층이 실직과 사업실패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중산층의 복원,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산층 복원은 직접적인 소득지원보다는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과 저소득보호를 위하여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2009년도 추경예산 중 일자리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조 6천억여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하여 총 4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희망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공근로를 하도록 하고 6개월 동안 월 83만원을 지급한다.

< 2-11> 2009

		()	()
		20,000	400
		3,052	68
		3,000	33
		460	10
		277	35
		3,070	143
		992	60
		182	17
		203	94
		92	5
		100	100
		730	50
		16,000	375
		115	-
		111	6
		30	0.6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업대상이나 일자리 종류 등에서 여전히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산층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업인 희망근로의 경우 신청자격이 소득수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 1.35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간이 한시적이고 일자리의 내용이 단순노무직종에 국한되어 안정적 일자리 제공효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희망근로 참여자 실태를 보면 전국 46.4%, 서울 43.5%가 60세 이상 노년층이고, 이전 직업별로는 일용근로, 주부, 자영업자 순으로 많았다. 즉, 현재 공공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빈곤층 및 노년층 대상 일자리 제공에 제한되어 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의 중도포기율은 11%가 넘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17일 현재 이 프로젝트의 전체 선발인원 가운데 11.4%인 2만 8,998명이 일자리가 허드렛일에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하였다. 중도포기율은 경기도가 16.5%, 서울이 12%로 특히 높다(세계일보, 2009. 6.18).

< 2-12>

		()	(%)	()	(%)
		250,550	100.0	49,278	100.0
		109,793	43.8	23,988	48.7
		140,757	56.2	25,290	51.3
	20	9,086	3.6	2,138	4.3
	30	21,063	8.4	4,442	9.0
	40	42,855	17.1	9,546	19.4
	50	61,469	24.5	11,703	23.8
	60	11,6077	46.3	21,449	43.5
		16,836	6.7	4,743	9.6
		18,270	7.3	2,987	6.1
		47,057	18.8	8,013	16.3
		15,455	6.2	2,886	8.9
		3,984	1.6	690	1.4
		23,672	9.5	181	0.4
		54,940	21.9	7,482	15.2
		532	0.2	76	0.2

: 2009.5.29

:

3.

1) 경기부양 정책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서울수도 금년 상반기(3월)에 2조 3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시 하반기에 6,639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투입하였다. 2차례 추경예산 편성으로 서울시 2009년도 예산총계규모는 23조 8,921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21조710억)보다 13.4% 증가하였고, 2008년도 최종예산 20조 9,744억원보다 13.9% 늘어났다. 상반기 추경예산의 57.4%는 대규모 SOC사업에 사용되어 경기부양에 주로 투입되었고, 서울형복지 내실화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각각 5.0%, 7.2%가 투입되었다. 하반기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업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주어졌다.

	1		2	
	()	(%)	()	(%)
	1,677	7.2	2,349	35.4
	1,168	5.0	1,210	18.2
SOC	13,452	57.4	743	11.2
	948	30.4	2,337	35.2
	23,427	100.0	6,639	100.0

:

2) 고용지원

서울시에는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2009년 2월에는 일자리 종합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개관하였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물론,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책과 해결 방안까지 알려주는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9월 3일 현재 4,022명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을 했다.

서울시는 고용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표 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년도 두 차례 추경예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2,51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일자리 창출정책은 사회적 일자리,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제 등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 체계를 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사업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환경, 정보처리, 복지 분야에서 5만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근로 사업도 단순노동의 한시적 일자리로 중산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100
			200
			200
			1,500
			1,000
가			4,000
			100
DB			300

< >

• DB	DB		200
		, ,	600
		,	500
		,	500
		,	500
			500
			600
		,	1,500
		, ,	1,500
			500
		,	600
			1,000
		가	200
		, ,	200

:

3) 직업교육 및 훈련

노동부나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정부의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교육 ·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4개의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전문직업교육, 여성 ·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직업교육훈련, 지역실업자 훈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직업훈련 규모가 작고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이다.

< 2-15>

	• 가	3,542	2,259	1,352	38.2%
	• 50-65 • 15-55 •	472	-	199	42.2%
	• ,	336	229	174	

: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는 15~55세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조례로 지정하고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50~65세의 준고령자 과정과 15~55세의 여성대상 과정이 있다.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2009년 2월말 현재 총 472명이 과정을 수료하고 이 중 199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42.2%에 달한다. 지역실업자 훈련프로그램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무료 직업훈련으로 민간학원 등 40여개의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생은 정부로부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는다. 2008년말 총 336명이 수료하여 그 중 56.3%인 174명이 취업을 하였다.

4)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서울시는 2008년 10월 빈곤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고 저소득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빈곤탈출의 희망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생계급여 위주의 단순지원 사업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자립·자활 능력을 키워 빈곤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서울 희망드림 बैं크 등 20개의 자립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2009년 382억원,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요 사업의 실적은 <표 2-17>과 같다.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사업대상을 기존의 수급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드림 बैं크, 꿈나래 통장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9년 최저생계비는 3인 가구 기준 1,081,186원이므로 차차상위계층 기준은 평균적으로 1,622천원이 된다. 이는 2008년 서울시 가구 중위소득 2,772천원²⁾의 58.5%에 해당된다. 즉,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대상을 차차상위까지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이 혜택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자격요건으로 자산기준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2008 가계동향조사 서울시 데이터 분석결과, 서울시 전 가구의 중위소득은 2,772,000원/월임.

< 2-16>

			(150%)
	,	, , , , ,	가
			,
		,	, ,
	SOS 가	, 가 ,	, 가 170% 가
		, ,	
		, ()	
		가	
	,	(,) ,	
	1 : 1		, 가 , 가

:

< 2-17>

	(가)		
	2009	2010	2009
	1,500	2,000	5,956가 (8)
	1,150	1,500	67가 1,205 (7)
	3,000	4,000	6,174가 (8)
SOS 가	1,500	2,000	1,442가 , 2,402 (7)

:

제3장 서울시 소득양극화 실태와 원인

제1절 서울시 중산층 붕괴실태

제2절 서울시 소득양극화의 결정요인 분석

제 3 장

서울시 소득양극화 실태와 원인

제1절 서울시 중산층 붕괴실태

1.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중산층은 감소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서울시 표본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의 소득계층구조도 중간계층(중위소득의 50~150%)은 감소하였고 빈곤층은 증가하였다. 중산층 비중은 2000년 67.8%에서 2008년 59.4%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빈곤층은 10.9%에서 16.6%로, 상류층은 21.3%에서 24.0%로 증가하였다. 감소한 중산층 8.4% 중 5.7%는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 3-1>

(: %)

2000	10.9	67.8	21.3
2001	11.0	68.0	21.0
2002	11.6	65.8	22.7
2003	15.0	61.5	23.6
2004	14.9	61.9	23.2
2005	16.0	62.1	21.9
2006	16.6	59.2	24.2
2007	17.3	58.6	24.1
2008	16.6	59.4	24.0

1 : = 50~150%
 2 : 1 가 ,

감소한 중산층은 어느 계층으로 이동했다고 엄밀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산층의 계층이동 상태를 확인한 남준우(2007)는 그의 연구에서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의 약 60%가 하위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

3)

1) 소득양극화의 정의

‘중산층 위기’와 함께 ‘중산층 붕괴’, ‘중산층 몰락’, ‘중산층 쇠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산층 붕괴, 쇠퇴 등은 중산층의 규모 감소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양극화, 특히 소득양극화 개념과 연결된다.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란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간의 해체’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소득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다. 소득양극화는 중간 소득계층의 인구비중을 기준으로 추계하거나, 중간계층과 타 계층의 소득격차를 추정하여 진단한다. 다만 중간 소득계층, 즉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중산층 비중의 감소 여부와 양극화 심화 여부에 대한 분석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계량적 지수를 개발한 Wolfson과 Esteban & Ray는 다음과 같은 개념정의를 기준으로 양극화 지수를 개발하였다. 우선 Wolfson은 ‘중간 부분이 소멸하는 현상’을 양극화로 정의한다. 양 극단으로 분포가 쏠리는 현상은 중간 부분의 소멸과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중간의 소멸 또는 해체’가 곧 양극화라는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나 명확한 공리체계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한편, Esteban & Ray는 양극화를 ‘분포의 어느 부분에서든 2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형성되는 이질적 집중 현상’으로 정의한다. 양극단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에 있어서의 분포 집중현상과 이로 인한 이질적 집단의 형성을 양극화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명확한 공리체계에 기반하여 소득을 비롯한 계량적 영역은 물론 인종, 종교 등 광범위한 사회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3) 이 부분은 삼성경제연구소(2006.8)의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보고서를 참조하였음.

2)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개념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은 소득분포의 서로 다른 측면을 파악하는 개념이다. 소득양극화란 중산층의 감소에 따라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양 극단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지칭하며, 소득분포에 상호 이질적인 계층그룹이 형성되는 집락화(clustering) 현상에 주목한다. 반면 소득불균등은 소득분위별 분배상황이 균형분포(uniform distribution)⁴⁾를 이루지 못한 현상을 의미한다. 소득양극화는 소득분포의 양 극단이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지만 소득 불균등은 원래 소득분배의 격차 수준 및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심해지면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불평등 정도가 소득계층의 양극화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의 정의 및 측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현상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소득불균등 수준이 양호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심각할 수 있으며 역으로 소득불균등이 심각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양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소득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소득불균등 지수는 개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득불균등 지수가 최소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불균등을 감소시키는 본질적 원리’⁵⁾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불균등지수의 하나인 지니계수 역시 이 원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양극화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불균등도는 개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이전 정책이 역설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데이터 분석결과도 두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준우(2007)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04년 사이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감소한 반면,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는 증가하였다(<표 3-2> 참조). 즉, 이 기간 동안 소득불평등 정도는 다소 개선된 반면, 양극화 정도는 더 심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경준(2007)은 두 지표가 이론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실증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데이터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경준(2007)의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치에서 두 지수의 차이가 거의 없고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4) 사회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한 분배 상태를 말함.

5) 피구-달톤(Pigou-Dalton)의 이전원리라고도 함.

< 3-2>

	1998	2000	2002	2004
	0.388	0.389	0.369	0.381
	0.301	0.309	0.303	0.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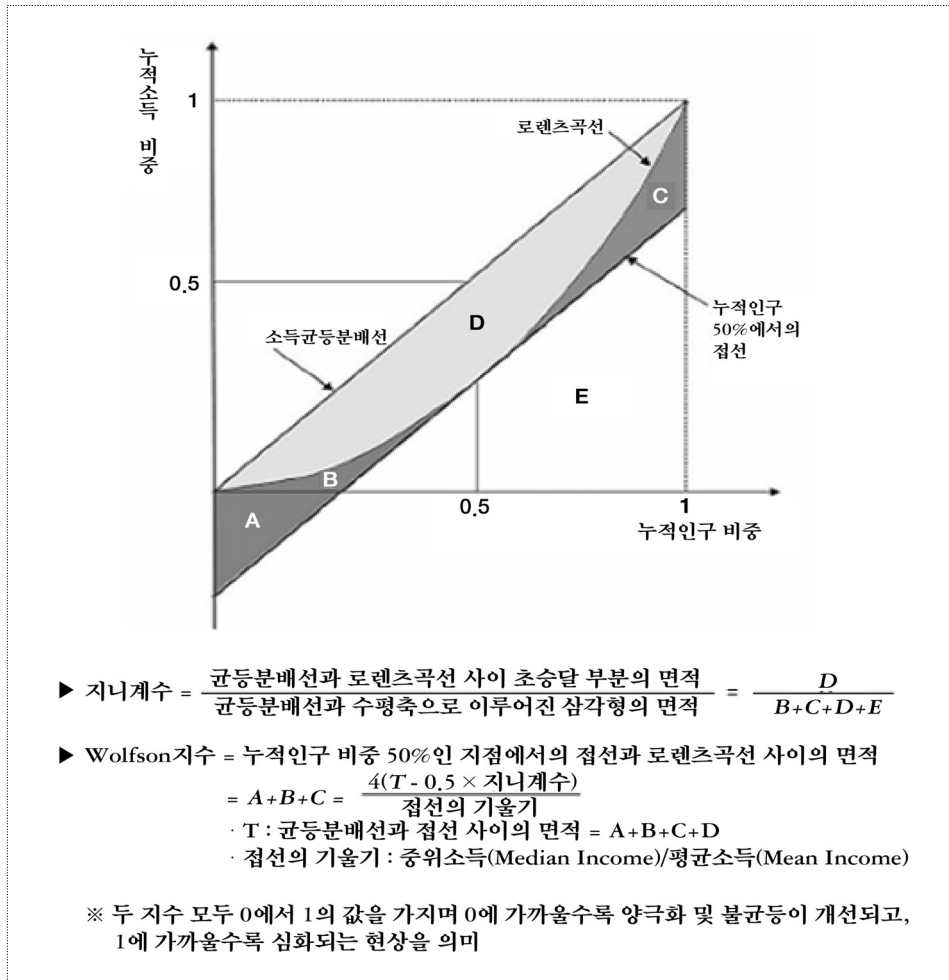
: ,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의 소득분배 구조를 진단할 때 소득불균등과 소득양극화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적 차이와 측정방법이 구분되면서도 2가지 변화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어느 하나만으로는 소득분배 양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지표는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정책방향에도 차이가 있다. 즉, 소득불평등 관점에서 보면 소득재분배, 빈곤문제 해결이 핵심적 과제인 반면, 소득양극화 관점에서는 중산층의 감소가 정책적 과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 경제 상황과 사회안전망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득불균등과 소득양극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지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은 측정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소득양극화는 Wolfson지수와 Esteban and Ray(ER)지수, 소득불균등은 지니계수와 5분위·10분위 분배율 등이 대표적인 측정지표이다. 이 중 Wolfson지수와 지니계수는 동일한 로렌즈곡선으로부터 유도되나 개념과 측정 방법이 상이하다(<그림 3-1> 참조). Wolfson지수는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여타 소득계층의 분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지니계수는 소득의 균등 분배선으로부터 개별 소득계층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지니계수와 같은 소득불균등지수는 특정 소득층에 분포가 밀집되거나 소멸되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6) 반면 ER지수는 중위 소득계층의 소멸양상을 반영하는 Wolfson지수와는 달리 여타 계층의 소멸 또는 집락화도 포함하여 측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 3-1> Wolfson

Esteban and Ray(1994)는 양극화 척도를 위한 공리체계를 제안하고 이에 기초해 양극화지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니계수는 피구-달톤 공리에 기초한 불균등지수이다. Esteban and Ray(1994)가 제안한 소득양극화 지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 Esteban and Ray의 직관적 양극화 정의

사회 구성원을 소득, 종교, 인종 등 일련의 특성에 기초해 서로 다른 계층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경우 그 사회는 양극화되었다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에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구성원들 간에는 매우 상이한 특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Step 2 : Esteban and Ray의 양극화 지수 도출과정

$$ER(\pi, y) = \sum_{i=1}^n \sum_{j=1}^m \pi_i \pi_j T(I(\pi_i), a(\delta(y_i, y_j)))$$

–개인 i가 개인 j에 대해 느끼는 소외감의 크기

$$a(\delta(y_i, y_j)) \text{ (단, } \delta(y_i, y_j) = |y_i - y_j| \text{)}$$

–개인 i 가 느끼는 동질성의 정도

$$I = I(\pi_i)$$

–i가 개인 j에 대해 느끼는 유효 적대감(effective antagonism)

$$T(I, a)$$

– π 는 가중치

즉, 특정 사회의 양극화는 동질성과 소외감의 함수로 정의되는 유효적대감의 총합이다.

Step 3 : 소득 양극화에 응용된 ER양극화 지수의 도출

소외도 a와 동질도 I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i 계층의 인구비중을 π_i 라 했을 때 동질함수는 π_i^a

–소외함수는 $|y_i - y_j|$ 로 측정

양극화의 정도는 이 두 함수의 곱을 계산하고 이를 모든 개인에 대해 더함으로 써 추계한다.

$$ER = A \sum_{i=1}^K \sum_{j=1}^K \pi_i \pi_j \pi_i^a |y_i - y_j| \quad A = \left[\sum_{i=1}^K \pi_i \right]^{-(2+a)}$$

양극화 공리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계수 a가 0 과 1.6 사이에 놓여야 한다. a가 0인 경우 ER 양극화지수는 지니계수와 일치하고 커질수록 일반적인 지니계수와의 차이가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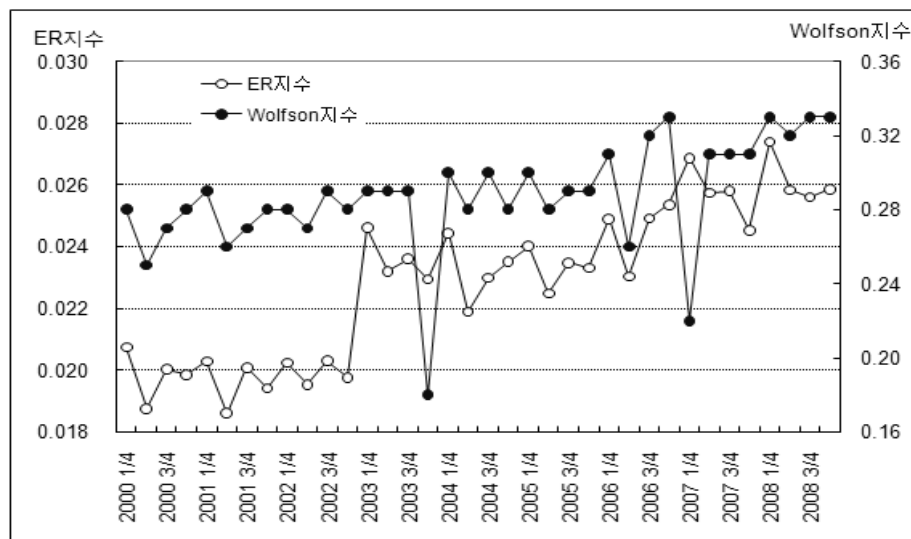
결국 ER지수는 계층 간 소득격차를 계층의 비중으로 가중 평균함으로써 양극화의 정도를 계산한다. ER지수는 계층 간 소득격차 또는 소득격차가 큰 계층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예를 들면, 각 계층의 규모가 일정하지만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될 때나, 계층 간 소득격차는 일정하지만 소득 격차가 큰 두 계층의 규모가 증가할 때 ER지수는 증가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리체계가 존재하는 양극화지수인 ER지수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양극화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ER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하기로 한다.

3.

1) 서울의 소득양극화 추이

2000년 이후 최근의 중산층 감소와 소득양극화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서울시 표본 분기별 데이터로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서 중산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인 집단으로 간주하였으며, 분석은 1인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Wolfson지수는 2003년 4/4분기와 2007년 1/4분기에 갑자기 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년 1/4분기부터 2008년 4/4분기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ER지수는 Wolfson지수보다 더 심한 양극화 추이를 보여준다. 2002년 4/4분기 0.0198에서 2003년 1/4분기 0.0246으로 한 단계 뛰어오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4/4분기에 0.0259 수준에 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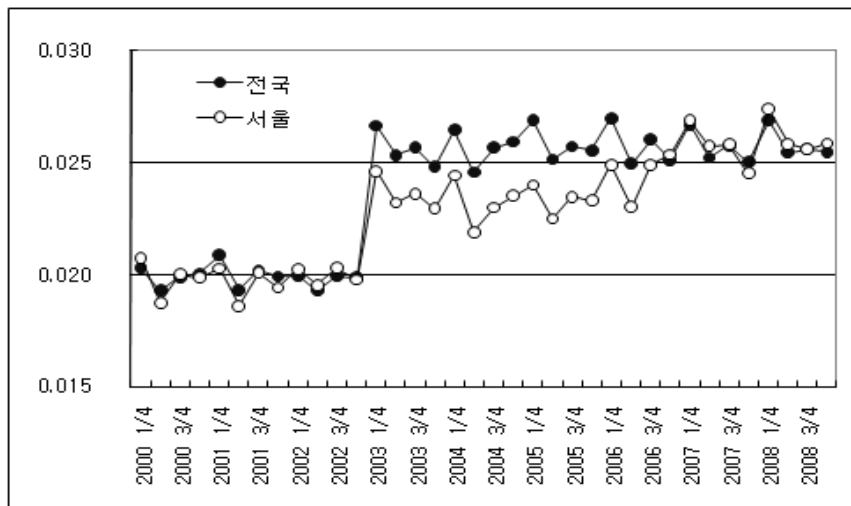
: 가
: 10 가

< 3-2>

ER지수가 2003년도에 급격히 상승한 것은 데이터상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상 소득자료는 2003년 이전까지 근로자가구의 소득만 수록하였다가 2003년부터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한 전 가구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

업자의 소득격차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데이터상의 문제가 소득양극화 지수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3년 카드대란과 내수버블 붕괴 등 경제적 타격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소득양극화는 대체로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2000년에서 2003년 이전까지 서울과 전국의 양극화 지수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3년 1/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전국의 양극화 지수가 서울보다 높아졌다. 이후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2008년 4/4분기 현재 ER지수는 전국 0.0255, 서울 0.0259로 서울의 양극화지수가 다소 높은 상태이다. 앞서 설명한 데이터상의 문제로 전국과 서울 모두 ER지수가 2003년에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 정도는 전국단위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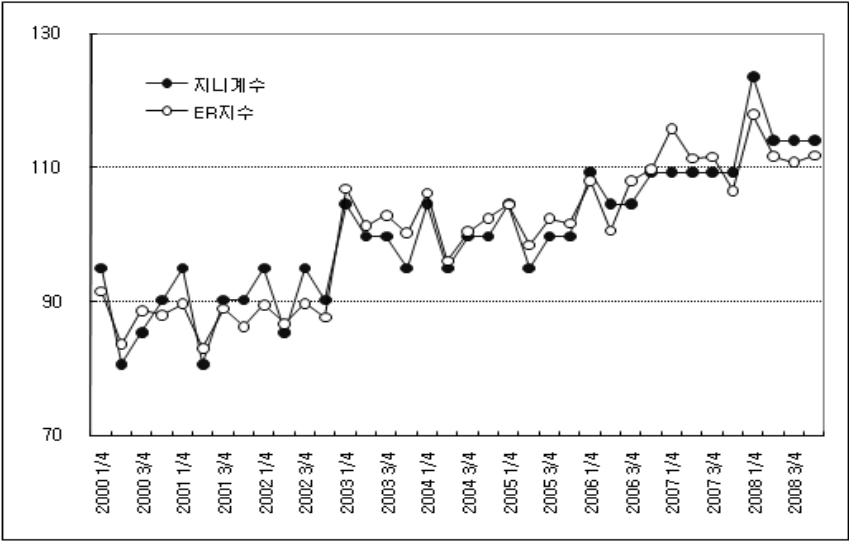
< 3-3> (ER)

2)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지수 비교

소득양극화 지수와 소득불균등 지수는 서로 다른 지수이기 때문에 표준화하여 두 개 지수를 비교 가능하도록 전환하였다. 서울의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와 소득불균등 지수(지니계수)는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면서 중산층 감소와 소득불균등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적 추이에 따른 지수의 흐름으로 본 서울경제의 상황은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현상이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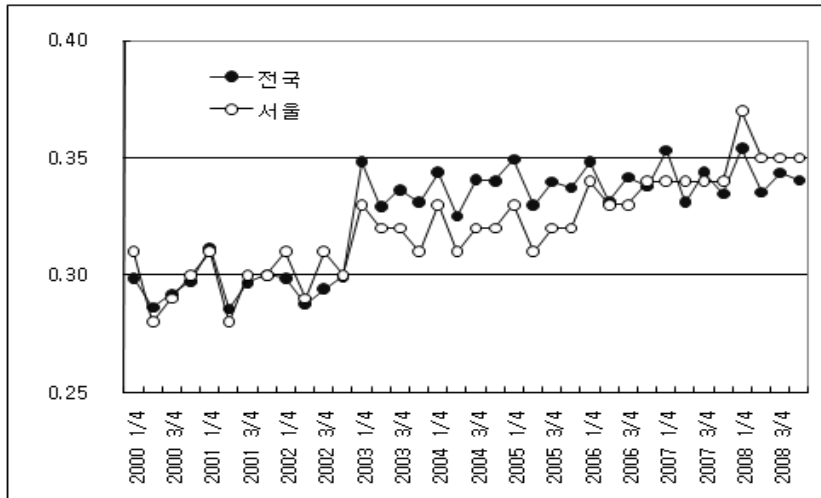
2003년 이전까지 소득불균등 지수(지니계수)가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보다 위에 있어 소득불균등이 소득양극화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3년 1/4분기부터 양극화 지수와 불

균등 지수가 모두 크게 상승하였으며 2007년 4/4분기까지는 소득양극화가 소득불균등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4분기부터는 소득불균등 지수가 소득양극화 지수보다 위에 있어서 소득양극화가 소득불균등 정도에 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가
 1 : 10 가
 2 : : 100+ (ER) ×10
 < 3-4>

2003년 이전까지 전국과 서울의 소득불균등 정도는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3년 1/4분기를 기점으로 전국의 소득불균등이 서울보다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불균등 수준이 전국보다 다소 높아졌다. 2008년 4/4분기에 서울의 지니계수는 0.35, 전국은 0.34이다.



< 3-5 >

제2절 서울시 소득양극화의 결정요인 분석

1. : 7)

우리사회에서 중산층의 쇠퇴 또는 소득양극화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에서 시작된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경제체질 개편을 요구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대량실업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중산층의 핵심을 이루어 온 화이트칼라의 분화가 진행된 것이 중산층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수준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일상화되고 평생직장개념이 사라지면서 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에서도 조기퇴직이 확산되었다. 외환위기는 모든 계층에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특히 중산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대체로 연령이 많아 임금이 높고, 노동조합이 없어 집단적 저항이 불가능한 관리직, 사무직, 행정직, 연구직에서 먼저 정리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신광영, 2004).

그러나 중산층 감소 또는 소득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7) 선행연구에서는 중산층 쇠퇴보다는 주로 소득양극화,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중산층의 쇠퇴가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연관성이 있다. 현실적으로도 소득양극화, 소득불평등 원인이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득양극화,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이다.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우선 경기변동요인이 지적된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삼성경제연구소(2006)는 소득양극화 원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과 내수의 성장률 격차 등 경기요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경우 소득양극화 지수는 2.3~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별되는 경제체계의 변화, 기술의 진보 등 외부 환경적 요인도 소득양극화 및 중산층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세계화는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 및 산업 간 고용 및 임금격차로 이어졌다. 경쟁력 높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도태되었고, 그 결과 중산층의 핵심이 되었던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여 중산층이 몰락하였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간일자리가 감소하고 상위, 하위 일자리는 증가하는 U자 형태로 고용구조가 변화하였고, 이는 곧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6). 즉,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던 대기업의 제조업 고용은 감소한 반면, 저임금 중소기업 고용과 임시직·일용직이 많은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은 증가하여 중간소득 일자리가 감소하였다는 해석이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부동산정책 실패, 사회안전망 기능 미흡, 빈곤대처 역량 부족 등 정부정책의 실패도 중산층 붕괴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소득양극화는 교육비 지출차이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인적 자본 투자 격차를 야기한다. 그러나 국가의 대응은 창업지원, 내수부양 등 대증요법적 접근이 중심이 되고, 인력투자 및 사회안전망 대책은 미흡하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된 화이트칼라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경기침체와 세계화로 인한 외부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영업이 몰락하고 이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였다는 것이다(매일경제, 2008.9.16). 삼성경제연구소(2006)의 연구에서도 자영업자 증가가 양극화 정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인구고령화, 가족구조변화 등으로 인한 노인가구, 1인 빈곤가구의 증가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고(신광영, 2008), 개인 및 계층 간 자산소유의 격차도 불평등 심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신동균, 2007). 신동균(2007)은 가구소득 중 비근로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소득분배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구소득 중 비근로소득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소득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부동산 소득의 여부가 소

특격차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집값인상이 중산층이 되기를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의 희망을 접게 만들고 있고 이것 또한 중산층 위기의 한 징후라는 진단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2.

1) 변수 및 분석방법

소득이 국민경제 활동의 최종적 결과인 만큼 소득양극화의 결정요인은 광범위하다. 그러나 효과적인 소득 양극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효과적인 양극화 해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소득 양극화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양극화 지수인 ER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양극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변수로 경기 및 자산가격 관련변수, 금융관련 변수,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 관련변수, 경제개방도, 복지예산 등을 포함하였다. 세부 변수는 <표 3-5>와 같다. 원인변수들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소득양극화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⁸⁾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주는 방법이다. 즉, 어느 한 변수에 대해 다른 변수의 과거 값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느냐를 검정함으로써 각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소득양극화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일용직 비율, 실업률, 경제개방도 등의 변수들이다. 한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득양극화 지수에 대해 선행성을 갖고 있는 변수로는 지역부도율, 서비스업 생산지수/제조업 생산지수, 실업률, 경제성장률, 복지예산증감률 등이 확인되었다. 자영업주 증감률, 임시직 증감률, 일용직 증감률 등 변수들과 임금근로자 비율, 주택전세가격상승률, 고용률, 복지예산비율 등 변수들도 분석에 포함시켰으나 분석과정 중 소득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타 변수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8)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는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가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인 회귀방정식은 단순한 상관성을 반영하나 노벨상을 수상했던 계량경제학자인 클라이브 그랜저(Clive Granger)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검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변수 X가 Y에 대해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다(Granger-Cause)고 함은 Y의 과거변수를 설명변수로 이미 포함한 상태에서 X의 과거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이들 변수가 미래의 Y값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를 말한다(C. Granger, 1969).

< 3-3>

가		0.0258	→	
	가	-0.2042	×	
	가	0.0834	×	
		0.6244	→	○
	(M1/L)	-0.1485	×	○
		0.0927	→	○
	(/)	0.2020	×	○
		0.1480	×	○
		-0.1070	×	○
		-0.6374	×	○
	/	0.3549	→	○
	((+)/GRDP)	-0.5277	←	○
		-0.0719	→	

→ : 가 가 가
 ← : 가 가
 × : 가
 ○ :

데이터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분기별 ER지수를 이용하였고, 결정요인 변수들도 같은 기간의 데이터를 취득·가공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GRDP(지역내총생산), 복지예산 변수는 연도별 자료만 취득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RATS(시계열자료 회귀분석) 프로그램의 Interpolation(보간법)을 이용해 분기별 데이터를 도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Interpolation한 자료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오차가 생길 수 있음을 명시해둔다. 회귀분석은 EVie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인 ER지수는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10분위별 도시근로자 가구 경상소득을 기초로 도출하였다.

한편, 소득양극화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 ER지수 산출에 사용한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상의 한계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앞서 소득양극화 지수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는 2003년 이전에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자료만 있고, 2003년부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가구 소득자료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일관성 결여는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단기간의 사례만이 분석에 이용된 것도 본 모형의 한계이다.

2) 모형 설정과 분석 결과

선정된 변수를 중심으로 ‘General-to-Specific’ 기법에 따라 양극화의 기본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기법은 상관성과 인과성이 높은 변수를 소득양극화 지수의 설명변수로 모두 포함하는 회귀방정식에서 출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변수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⁹⁾. 순차적으로 변수를 제거할 때 설명력이 있는 변수들 중 공통 변수를 양극화를 설명하는 기본 방정식으로 선정하였다. 변수의 제거 순서에 따라 유의성을 유지하는 변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정된 변수 중 공통되는 변수만을 기본 방정식에 포함시켰다. 이들 공통 변수들은 양극화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최소한의 설명변수들이다.

모형 추정 결과, 실업률과 임시직 비율이 소득 양극화 지수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소득양극화가 악화되고, 임시직 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득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1.		2.		3.	
			t-		t-		t-
		0.025	1.19	0.012	0.87	0.005	0.57
/가		0.020	1.69				
	가	-0.001	-1.23				
	가	-0.0003	-0.08				
		0.391	3.32***	0.412	5.38***	0.406	5.38***
	(M1/L)	0.035	0.14				
		0.042	1.49				
	(/)	0.489	1.09				
		-0.087	-0.09				
		-1.850	-3.01***	-1.079	-2.06**	-1.066	-2.05**
		0.010	0.04				
	/	0.327	1.02				
	((+)/GRDP)	-0.168	-1.15				
		-0.008	-2.38**	-0.002	-0.66		
R ² /Adjusted R ²		0.777	0.607	0.484	0.434	0.477	0.444
D.W.		2.39		2.65		2.64	

: * 10% , ** 5% , *** 1%

9) ‘General-to-Specific’ 기법은 무수한 설명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지켜지고 모형의 간결성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설명변수를 선별해내는 통계적 기법으로 Hendry(1995)가 제안하였으며 순차적 검정 절차(sequential-testing procedure)라고도 불림(Hendry, D. F., 1995; Krolzig, Hans-Martin, 2003).

<표 3-4>에서 확인된 서울의 소득양극화 결정변수들을 이용하여, 각 변수가 소득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설명하는 기본 방정식(양극화 결정 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실업률이 1% 증가하면 소득양극화 지수는 0.4% 증가하고, 임시직 비율이 1% 상승하면 소득양극화 지수는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가 빈곤층을 양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직 일자리가 제공되면 적어도 한계중산층 또는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LNER = 0.005 - 1.066 DLNTEMP + 0.406 DLNUNEMP				
(0.57)	(-2.05)**		(5.38)***	
R ² = 0.4767 , Adjusted R ² = 0.4440 , Durbin Watson = 2.6392				
DLNER :	ER		1	
DLNTEMP :			1	
DLNUNEMP :			1	
1 :	()	t-		
2 :	* 10%		, ** 5%	, *** 1%

이어서 기본방정식을 중심으로 유의성이 인정된 변수들을 추가하여 이들 변수의 소득양극화 지수에 대한 설명력을 도출하였다. 설명력(R²)의 개선정도에 따라 변수들의 중요도를 부여하고, 기본방정식에 소득양극화 결정 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기여도를 판정하였다. 기여도는 해당 방정식의 ‘조정된 R²’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보는 ‘한계 (Marginal) R²’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용직 비율과 경제개방도, 주가상승률, 예대율 등 순으로 양극화 추가 기여율이 높았다. 일용직 비율 변수를 기본 방정식 체계의 설명 변수로 추가할 경우 R²의 값이 0.0642로 가장 크게 증가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 경제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출+수입)/GRDP 변수는 추가 기여율이 0.0555로 2위를 차지하여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나타내는 주가상승률과 금융관련 변수인 예대율도 R²의 증가규모가 3, 4위를 기록하였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제조업 생산지수와 경제성장률도 기본방정식에 설명변수로 추가할 경우 R²의 증가규모가 5위, 6위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떨어졌다.

< 3-5> 가 R² 가

가		t	R ²	R ² 가	
	-0.4273	-2.27**	0.5082	0.0642	1
	-0.2074	-1.70*	0.4995	0.0555	2
가	-0.0010	-1.96*	0.4896	0.0456	3
	0.7773	1.87*	0.4841	0.0401	4
/	0.3744	1.64	0.4718	0.0278	5
	0.0091	0.94	0.4638	0.0198	6

3) 전국 소득양극화의 결정요인과의 비교

삼성경제연구소(2006.8)의 보고서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에서 전국 데이터를 기초로 소득양극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기 요인 중 경제성장률 및 수출과 내수의 성장률 격차가 소득양극화 지수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 방정식의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조정된 R²의 증가규모를 분석한 결과, 임시직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이 각각 1, 2위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개방도, 일용직 비율, 가계대출 비중 등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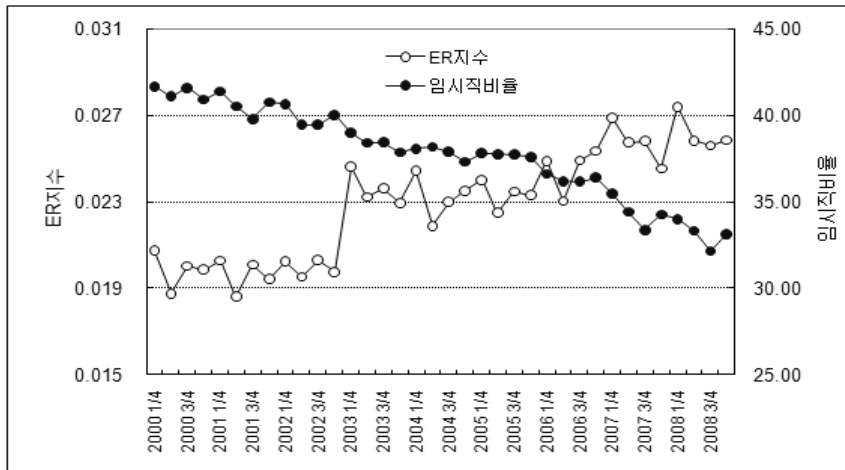
이는 이번 분석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요인인 실업률과 임시직 비율이 서울의 소득양극화 결정 모형을 구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 기간이 다른 원인도 있지만 서울의 특성상 나타난 차이와 시간적 변화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추이가 분석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울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비율, 임시직비율, 일용직 비율은 분석기간 동안 감소추세를, 임금근로자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전국의 상황은 자영업자 비율과 임시직 비율, 일용직 비율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모두 상승하는 등 서울과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3-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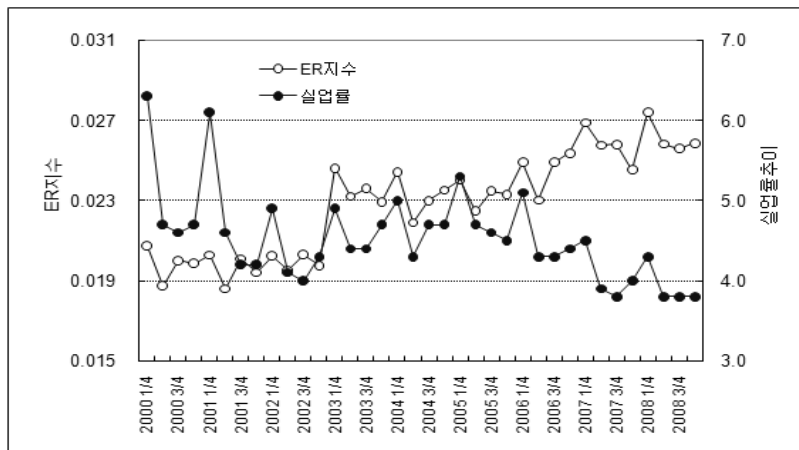
2000	24.6	69.7	40.9	17.0
2001	24.7	70.1	40.8	17.5
2002	24.7	70.1	40.0	17.4
2003	24.9	70.0	37.9	14.7
2004	24.1	71.5	37.3	15.4
2005	23.2	72.3	37.6	15.5
2006	23.0	72.9	36.4	15.0
2007	22.3	73.9	34.3	14.3
2008	21.6	74.9	33.1	14.3

서울의 ER지수와 임시직 비율의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면 ER지수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03년 1/4분기부터 한 단계 상승하여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는 반면, 임시직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본방정식의 분석결과와 같이 임시직 비율이 감소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는 <그림 3-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3-6> ER

한편, 서울의 실업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1/4분기에 계절적 변동요인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면 ER지수의 추이와 비슷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7> 참조). 즉, 실업률이 상승하면 양극화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는 실업률과 소득양극화가 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3-7> 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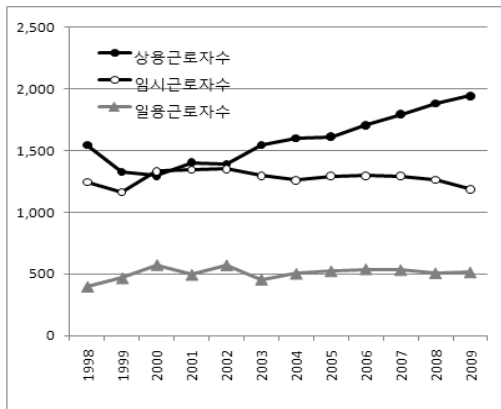
3.

일반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심해지면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불평등 정도가 소득계층의 양극화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소득불평등 관점에서 보면 소득재분배, 빈곤문제 해결이 핵심적 과제인 반면, 소득양극화 관점에서는 중산층의 감소가 정책적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안전망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정도와 양극화 정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소득양극화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중산층이 해체되면서 심화되었으며, 2003년 내수버블의 붕괴로 더욱 악화되었다. 작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양극화는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고용부진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 부문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와 중산층을 감소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도 2003년 내수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에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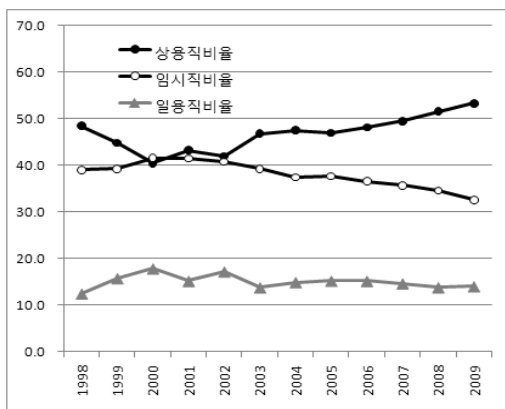
전국단위에서 소득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경제성장률과 수출·내수의 성장률 격차 등 경기요인인 반면, 서울에서는 경기 변수 등의 제반 변수보다 실업률과 임시직 비율 등 노동시장 관련 변수가 소득양극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임시직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득양극화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해야 할 대목은 임시직 비율의 증가가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임시직 비율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임시직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됨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주고, 이에 따라 소득양극화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2009년 기간 동안 소득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용직 근로자는 절대적 숫자뿐 아니라 구성 비율에서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임시직 근로자는 숫자와 비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 3-8>

()



< 3-9>

()

즉, 이 기간 동안 상용직이 임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임시직 일자리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함으로 인해 저소득계층의 고용기회가 더욱 감소하였고 이것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저임금의 임시직 일자리는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계가 많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편이 판매,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할수록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혼여성일수록 비정규직에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 성별 비정규직의 비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혼자는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의 경우 기혼남성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39.1%인 반면, 기혼여성은 69.3%로 매우 높다(한계례21, 2009.10.19). 즉, 남성가구주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기혼여성이 맞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저소득 기혼여성이 맞벌이를 통해 가구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것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 서울시 중산층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및 시사점

제 4 장

서울시 중산층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제1절 조사개요

1.

경제위기에 따른 중산층의 생활변화와 문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작년말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해이기 때문에, 조사내용은 주로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구이다. 중산층은 소득이 서울시 가구 중위소득의 50~150%인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2008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평균 2,772천원이고, 따라서 중위소득의 50%~150% 범위는 1,386~4,158천원이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조사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가구 총수입을 조사하였고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인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판정기준을 실제 중산층 범위인 1,386~4,158천원보다 높게 잡은 것은 2008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다소 낮게 집계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9년도 최저생계비가 3인가구 기준 1,081,186원인 것과 비교하면 중산층의 최저기준인 1,386천원원은 최저생계비의 130% 수준으로 일반적인 중산층으로 보기에는 다소 적은 감이 있다.

2.

조사내용은 1) 가구특성 및 주거상황, 2)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이력, 금융위

기 이후의 변화상황, 3) 수입, 지출 등 가구의 경제상태, 4) 금융위기 이후의 생활변화,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 계층의식, 5)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주요 복지욕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문별 조사내용은 <표 4-1>과 같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의 질문지를 참고할 수 있다.

< 4-1>

가	· 가 · 가 , · 가 : , , , , · , , ·
	· 가 : , , , , , , · 가 · ·
가	· : , , , , · : , , , , · , ·
	· - · - · - 가 · 가 , , · , ·
	· , · · 가

3.

연구진에서 조사내용,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등 전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사작업 및 데이터구축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담당하였다. 조사는 연구진이 개발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면접원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소속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조사에 투입되었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성된 질문지 중 20%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구소 검증원을 통한 전화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9년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30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응답자는 각 가구의 가구주를 우선 응답자로 지정하였으나, 가구주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주의 배우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조사대상 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산층(가구 월평균 소득 150~450만원 이하) 가구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사 완료한 유효 표본은 1,005명이다. 표본오차는 $\pm 3.1\%$ (신뢰수준 95%)이다.

표본추출은 1차로 PPS(확률비례계통추출)로 표본지점(동)을 선정하고, 하나의 표본지점에 서 무작위로 7~8가구를 조사하였다. 표본할당은 분석에 필요한 자치구별 최소 표본수를 확보

< 4-2>

	가 (가)	()		
	3,309,890	144	1,000	3.1
	54,534	4	31	17.6
	46,625	4	30	17.9
	76,125	5	34	16.8
	111,485	5	38	15.9
	125,845	6	39	15.7
	131,213	6	40	15.5
	137,907	6	41	15.3
	146,894	6	42	15.1
	112,719	5	38	15.9
	116,492	5	38	15.9
	191,342	7	47	14.3
	145,477	6	41	15.3
	117,866	5	38	15.9
	135,042	6	40	15.5
	148,261	6	42	15.1
	178,045	6	45	14.6
	132,705	6	40	15.5
	85,171	5	35	16.6
	135,609	6	40	15.5
	136,863	6	41	15.3
	202,788	7	48	14.1
	124,933	6	39	15.7
	186,020	7	46	14.5
	187,000	7	46	14.5
	142,929	6	41	15.3

하고 구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표본(25개)을 우선 할당한 후 비례 배분방식으로 할당하였다. 자치구별 최종 표본할당 분포는 <표 4-2>와 같다.

제2절 조사결과 및 시사점

1. 가

조사결과 가구주가 응답한 경우가 52.1%이고, 배우자가 응답한 경우는 47.9%이다. 가구주 특성은 91.5%가 남성이고, 연령별로는 30~50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혼인상태는 88%가 기혼의 유배우 상태이고 학력은 대졸 이상 48.5%, 고졸이 41.9%로 일반적인 중산층의 특성에 부합된다.

가구원수는 4명이 45.8%로 가장 많고, 평균은 3.5명이다. 이는 2008년말 서울시 평균가구원수인 2.55명보다는 많은 것이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56.6%로 가장 많으며 전세가 34.4%로 그 다음으로 많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수준이 30%로 가장 많으며, 월평균은 288만원이다.

< 4-3>

가		N(%)	가		N(%)
		920(91.5)	가	2	187(18.6)
		85(8.5)		3	228(22.7)
	39	254(25.3)		4	460(45.8)
	40	348(34.6)		5	129(12.9)
	50	267(26.6)			3.51
	60	136(13.5)			
		884(88.0)		가	568(56.5)
		29(2.9)			346(34.4)
		24(2.4)		/	27(2.7)
		55(5.5)			54(5.4)
		13(1.3)			9(0.9)
		82(8.2)		150 200	185(18.4)
		421(41.9)		200 300	283(28.2)
		487(48.5)		300 400	302(30.0)
		15(1.5)		400~450	235(23.4)
					288

가계동향조사에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가 13.8%인 반면, 이번 조사의 1인 가구는 5.7%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에서의 50~150% 수준을 상향조정하여 <표

4-4>와 같이 계층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월소득 150~200만원 가구는 개략적으로 중위소득의 50~72%에 해당되는 계층으로 중산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한계중산층 범주에 해당되며, 200~300만원 가구도 여전히 중위소득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중하계층에 해당된다. 반면에 월소득 300만원~400만원 가구는 중위소득의 약 100~130%에 해당되는 중상계층이고, 400~450만원 가구는 그보다 더 높은 중상의 상 또는 상하계층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 가구특성을 보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 한계중산층 가구일수록 여성가구주가 많고, 연령이 높으며, 교육수준도 낮다. 또한 사별 또는 미혼인 경우가 많아 가구구성에 있어 1인 가구 비중이 17.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4-4>

2008 가					
50%	1,386,000	50~75%	150~200		
75%	2,079,000				
100%	2,772,000	75~100%	200~300		
130%	3,603,600	100~130%	300~400		
150%	4,158,000				
160%	4,435,200	130~160%	400~450		()

< 4-5>

가

(: %)

		150~200 (n=185)	200~300 (n=283)	300~400 (n=302)	400~450 (n=235)
가		80.0	90.1	95.4	97.4
		20.0	9.9	4.6	2.6
가	39	20.5	29.3	25.5	23.8
	40	21.6	33.2	38.7	41.3
	50	28.6	24.0	26.2	28.5
	60	29.2	13.4	9.6	6.4
가		70.8	85.9	93.7	96.6
		9.2	3.2	0.7	0.4
		6.5	1.8	2.0	0.4
		11.4	6.7	3.3	2.1
		2.2	2.5	0.3	0.4
가		18.9	8.5	5.6	2.6
		60.0	48.4	39.4	23.0
		19.5	41.0	55.0	71.9
		1.6	2.1	0.0	2.6
가	1	17.8	5.7	2.3	0.4
	2	22.2	13.4	11.6	6.8
	3	21.6	23.7	22.2	23.0
	4	27.6	44.5	49.7	56.6
	5	10.8	12.7	14.2	13.2
가		41.6	51.2	57.6	73.2
		36.2	37.5	39.1	23.4
		6.5	3.9	0.7	0.9
	/	14.1	6.4	1.7	2.1
		1.6	1.1	0.7	0.4
		100.0	100.0	100.0	100.0

2.

1) 가구주 경제활동

(1) 가

가구주의 94.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50대까지는 97% 이상 취업 중이고, 60대 이후 계층에서만 74.3%로 낮은 편이다. 가구의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취업률도 높다.

< 4-6> 가

(: %)

가	39	98.4	가	150~200	87.0
	40	98.9		200~300	95.1
	50	97.0		300~400	97.0
	60	74.3		400~450	98.3

경제활동 참가자의 취업직종을 보면 판매·서비스직이 48.2%로 가장 많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현재 취업률이 낮고,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많으며, 자영업자가 절반 이상이다. 임금봉급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81.5%가 정규직이지만 월소득 150~200만원 집단은 50.7%, 200~300만원 집단은 76.2%만이 정규직이다. 취업형태도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시간제 근무형태가 많은 편이다.

< 4-7> 가

(: %)

		(n=954)	150~200 (n=161)	200~300 (n=269)	300~400 (n=293)	400~450 (n=231)
		9.7	1.9	6.3	8.2	21.2
	·	26.6	7.5	25.7	31.4	35.1
		48.2	65.8	48.3	46.4	38.1
	·	8.9	11.8	11.2	8.5	4.8
		6.2	13.0	7.8	5.1	0.9
		53.8	46.6	54.6	57.3	53.2
		36.5	50.9	38.7	32.8	28.6
		9.6	2.5	6.3	9.9	18.2
		81.5	50.7	76.2	89.3	95.9
		17.9	49.3	22.4	10.1	4.1
		85.6	60.0	83.0	91.1	96.7
		8.4	22.7	10.9	3.6	3.3
		5.5	17.3	4.8	4.8	0.0
		94.3	86.7	94.6	94.6	98.4
		5.1	13.3	4.1	4.8	1.6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재의 경제활동을 보면 지난해 금융위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가 73.8%이다. 변화를 경험한 경우, 변화된 내용은 주로 수입의 변화가 가장 많았고(24.2%), 나머지 부분은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월소득 150~200만원의 중하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 4-8> 가 (: %)

	(n=954)	150~200 (n=161)	200~300 (n=269)	300~400 (n=293)	400~450 (n=231)
	1.2	3.1	0.4	0.3	1.7
	1.3	1.2	0.7	1.0	2.2
	1.4	2.5	1.1	0.3	2.2
	1.3	2.5	1.1	0.0	2.2
	0.9	1.9	0.7	0.0	1.7
	25.9	33.5	28.6	20.5	24.2
	73.8	65.2	71.4	79.2	75.8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정규직 여부, 취업형태나 근로시간 등에서 오히려 정규직이나 상용직, 전일제 등으로 상황이 개선된 사례가 더 많다. 반면에 전체의 25.9%는 수입에 변화가 있었고, 그 중 감소한 경우가 87%로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실업이나 고용환경 변화는 적은 편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의 금융위기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적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여파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9> 가 (: %)

	→	12.5		→	0.0
(n=8)	→	75.0	(n=4)	→	75.0
		12.5			25.0
	→	28.6			87.0
(n=7)	, →	57.1	(n=247)	가	11.7
		14.3			1.2

한편, 이번 조사가 현재 중산층으로 남아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탈락한 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실업문제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 가

현재 미취업 상태인 가구주는 5.1%로 그 비율은 낮은 편이다.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유는 대체로 정년퇴직, 건강이나 고령상의 문제가 아주 많다. 이는 미취업 상태인 가구주 51명 중 68.6%가 60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미취업상태가 된 시점은 2001~2007년 사이가 가장 많으며 2008년 이후는 31.9%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미취업 상태는 작년도 금융위기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사유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파급효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 4-10> 가

(: %)

		(n=51)	150~200 (n=24)	200~300 (n=14)	300~400 (n=9)	400~450 (n=4)
		33.3	25.0	28.6	55.6	50.0
		25.5	16.7	35.7	33.3	25.0
	/	11.8	20.8	0.0	11.1	0.0
		11.7	8.4	21.4	0.0	25.0
		9.8	16.7	7.1	0.0	0.0
		4.0	8.4	0.0	0.0	0.0
		4.0	4.2	7.1	0.0	0.0
	1997	8.5	8.7	0.0	25.0	0.0
	1997~2000	12.8	17.4	7.7	12.5	0.0
	2001~2007	46.8	39.1	46.2	50.0	100.0
	2008	31.9	34.8	46.2	12.5	0.0
		68.6	62.5	71.4	66.7	100.0
		17.6	20.8	7.1	33.3	0.0
		9.8	12.5	14.3	0.0	0.0
	가	2.0	0.0	7.1	0.0	0.0
		2.0	4.2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계층별로는 차이를 보여, 월소득 150~200만원의 최하그룹에서 미취업 사유로 일거리 감소/장사가 안됨, 직장 또는 본인의 사업실패가 상대적으로 많고, 200~300만원 집단에서는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많은 편이다. 이는 미취업 이전에 하던 일로 월소득 150~200만원 집단은 자영업이, 200~300만원 집단은 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미취업 기간은 전체적으로 2001~2007년 사이가 가장 많으나, 월소득 300만원 이하의 중하 집단에서

2008년 이후 미취업상태로 변화된 사례도 많은 편이다.

현재 미취업 상태인 가구주 대부분이 고령자 계층이기 때문에 현재 구직활동 중인 경우는 29.4%로 매우 낮다. 다만 월소득 150~200만원 집단의 50%, 200~300만원 집단의 21.4%가 구직활동 중이어서 저소득 계층일수록 일하려는 욕구가 높은 반면, 300만원 이상 집단은 취업 희망자가 전혀 없다. 일거리를 원하는 경우 창업보다는 취업을 더 희망하며, 관련정보는 주로 친지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신문이나 정보지, 인터넷 순으로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마땅히 알아볼 곳이 없다는 응답도 33.3%에 달하였다.

< 4-11> 가 (: %)

		(n=15)	150~200 (n=24)	200~300 (n=14)	300~400 (n=9)	400~450 (n=4)
		29.4	50.0	21.4	0.0	0.0
		40.0	41.7	33.3		
		53.3	58.3	33.3	-	-
		6.7	0.0	33.3		
		53.3	58.3	33.3		
		26.7	33.3	0.0		
		20.0	25.0	0.0		
		6.7	8.3	0.0	-	-
		6.7	8.3	0.0		
		33.3	33.3	33.3		
		6.7	-	33.3		
		100.0	100.0	100.0	100.0	100.0

2) 배우자의 경제활동

가구주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900사례 중에서 배우자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38.7%이며,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일하는 비율이 높다. 해당가구의 소득수준에 배우자의 수입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 4-12> 가 (: %)

		38.7	가	39.5 23.9
가	39	28.6		150~200
	40	43.2	가	200~300
	50	45.9		300~400
	60	28.9		450
				24.1 35.2 39.6 50.0

취업 중인 배우자의 경제활동 특성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모든 계층에서 판매·서비스직 종사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다음으로 많은 직종으로는 월소득 300만원 미만의 중하계층은 기능직과 노무직, 300만원 이상 중상계층은 일반사무직, 전문직 순이다. 고용조건도 중하계층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고용형태가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월소득 150~200만 미만의 최하계층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 4-13> 가

(: %)

		(n=348)	150~200 (n=33)	200~300 (n=88)	300~400 (n=113)	400~450 (n=114)
		6.9	3.0	1.1	5.3	14.0
		14.4	6.1	4.5	12.4	26.3
	·	64.4	63.6	69.3	72.6	52.6
	·	6.3	15.2	12.5	3.5	1.8
		7.8	12.1	12.5	5.3	5.3
		50.0	33.3	44.3	49.6	59.6
		21.3	6.1	20.5	24.8	22.8
		3.4	0.0	1.1	3.5	6.1
	가	25.0	60.6	34.1	21.2	11.4
		50.0	27.3	23.1	60.7	60.3
		48.9	72.7	71.8	39.3	39.7
	/	1.1	0.0	5.1	0.0	0.0
		58.6	27.3	35.9	71.4	66.2
		28.2	54.5	35.9	19.6	26.5
		12.1	18.2	23.1	8.9	7.4
	/	1.1	0.0	5.1	0.0	0.0
		74.1	54.5	53.8	80.4	83.8
		24.1	36.5	41.0	19.6	16.2
	/	1.7	9.1	5.1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재 하는 일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새로 시작한 경우가 14.7%이고, 특히 중하계층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새로 일을 시작한 이유로는 가장의 수입 감소가 29.4%로 가장 높고, 자녀교육비 또는 생활비에 보태려는 목적이 그다음으로 많다. 가장의 실직이나 부채가 이유인 경우는 각각 3.9%이다. 소득계층별로 중하계층에서는 가장의 소득감소가 이유라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중상계층에서는 자기개발, 자녀교육비 보충, 가장의 일 도움 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앞서 가구주의 경제활동 특성에서 금융위기 이후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큰 변화가 없던 것과 같이,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구주의 실직 등 극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구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14> 가

(: %)

		(n=348)	150~200 (n=33)	200~300 (n=88)	300~400 (n=113)	400~450 (n=114)
		14.7	18.2	22.7	12.4	9.6
		85.3	81.8	77.3	87.6	90.4
	가	29.4	50.0	40.0	14.3	18.2
		17.6	0.0	20.0	14.3	27.3
		17.6	33.3	15.0	14.3	18.2
		15.7	0.0	5.0	21.4	36.4
	가 가 ,	11.8	16.7	5.0	28.6	0.0
		3.9	0.0	10.0	0.0	0.0
		3.9	0.0	5.0	7.1	0.0
			100.0	100.0	100.0	100.0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 중 취업희망자는 21.7%로,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욕구가 높았다. 희망형태는 창업(19.2%)보다는 취직(80.8%)이 더 높았다.

< 4-15>

(: %)

		(n=552)	150~200 (n=104)	200~300 (n=162)	300~400 (n=172)	400~450 (n=114)
		21.7	27.9	25.9	18.6	14.9
		19.2	24.1	16.7	15.6	23.5
		80.8	75.9	83.3	84.4	76.5
	가	33.3	24.1	38.1	34.4	35.3
		23.3	44.8	26.2	9.4	5.9
		15.0	3.4	16.7	28.1	5.9
		15.0	3.4	7.1	15.6	52.9
	가	5.0	6.9	7.1	3.1	0.0
		4.2	6.9	0.0	9.4	0.0
	가 ,	3.3	10.3	2.4	2.4	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

금융위기 이후 고용 또는 소득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일거리 또는 손님이 줄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근로시간 감소, 임금삭감 등의 순으로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의 경우는 발생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시정연 조사에서 조사대상 가구의 67%가 일감감소를, 43.3%는 임금삭감이나 동결을,

27.3%는 임금체불을 경험하였다. 또한 9%는 부당해고·정리해고를, 2.4%는 명예퇴직·희망 퇴직을 당했다(김경혜, 1998). 이는 1998년 시정연 조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중하계층이 중상계층보다 고용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4-16>

(: %)

			가				
	가	가	150~200	200~300	300~400	400~450	
(,)	23.2	4.7	37.8	27.2	19.2	19.1	24.9
	5.3	1.9	8.6	7.8	5.6	4.3	6.5
	5.2	0.2	3.2	8.5	4.0	6.4	5.7
()	2.5	1.3	5.9	4.9	2.3	2.1	3.7
(,)	1.7	0.2	3.2	2.8	1.0	0.9	1.9
,	0.7	0.8	1.6	2.1	1.0	0.9	1.4
,	0.5	0.9	2.2	1.8	0.3	1.7	1.4
	0.7	0.4	1.6	1.4	0.3	1.3	1.1
	0.1	0.1	0.5	0.4	0.0	0.0	0.2

3. 가

1) 수입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총 수입은 288.4만원이며, 주수입원은 가구주의 사업 및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득계층별로 주수입원에 큰 차이가 없으나, 월소득 150~200만원 최하층에서 가구주가 주수입원인 비율이 82.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낮아 가구주가 가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가구소득수준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최하계층의 경우 연금·퇴직금이 주수입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계층의 상당수가 은퇴한 고령자 가구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의 31.1%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간 이하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소득감소 경험이 더 많다.

< 4-17> 가

(: , %)

		(n=1005)	150~200 (n=185)	200~300 (n=283)	300~400 (n=302)	400~450 (n=235)
()		288.43	156.18	232.01	322.32	416.96
가	·	89.0	82.2	89.0	91.4	91.1
	·	3.0	3.2	2.5	2.6	3.8
가	·	3.3	4.9	3.5	2.6	2.6
		2.0	3.2	2.5	1.7	0.9
·		1.5	3.8	1.1	1.0	0.9
가	·	0.6	1.6	0.7	0.3	-
		0.2	0.5	0.4	-	-
·		0.2	-	-	0.3	0.4
·		0.1	-	-	-	0.4
가		64.3	58.4	62.2	67.5	67.2
		4.4	2.2	3.9	5.6	5.1
		31.1	39.5	33.6	26.5	27.7
		100.0	100.0	100.0	100.0	100.0

2) 지출

한달 평균 총지출은 202.8만원이며,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교육비, 식료품비, 공과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 순이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월소득 150~200만원 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교육비가 가장 큰 지출항목이고, 이어서 식료품비, 공과금 순이었다. 반면에 월소득 150~200만원 가구는 식료품비가 35.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공과금, 주거, 의료비 순으로 높았다. 이는 이 계층의 가구특성과 관련이 있다. 앞서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계층은 고령자가 많아 교육비는 적게 드는 반면에 의료비 지출이 많고, 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달 지출되는 월세 및 임대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4-18> 참조).

한편,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54.1%가 생활비를 줄였다고 응답하였고, 지출을 줄인 항목으로는 외식비, 외식비를 제외한 식료품비 순으로 식비에 대한 지출감소가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 사교육비, 피복비, 여가·문화비 순으로 지출을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참조). 계층별로 월소득 300만원 이상 중상층은 외식비를 가장 많이 줄인 반면, 300만원 미만 중하층은 외식비보다 식료품비를 더 많이 줄였다. 또한 중상층은 여가·문화비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하층은 통신비를 줄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중상층일수록 외식비나 여가·문화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생필품적인 성격이 아닌 이들 항목에 대한 지출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된다. 외식비, 여가문화비 등을 줄인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사회적 측면

에서는 의미있는 변화이다. 여가문화는 상대적으로 필수적인 지출항목은 아니지만, 중산층으로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아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 4-18> 가 (: , %)

		(n=1005)	150~200 (n=185)	200~300 (n=283)	300~400 (n=302)	400~450 (n=235)
()		202.80	127.83	175.76	225.65	265.41
(1)	가· (,) 가· 가	34.0	9.2	32.9	38.4	49.4
		24.9	35.7	25.8	20.9	20.4
		13.8	17.3	14.8	14.9	8.5
		5.3	4.9	4.9	5.0	6.4
		5.3	4.3	4.6	6.0	6.0
		4.4	10.8	3.9	2.3	2.6
		3.0	8.6	2.8	2.0	0.0
		2.5	2.7	2.1	3.3	1.7
		2.1	1.1	2.8	2.3	1.7
		2.0	3.2	2.1	1.7	1.3
		0.8	0.0	1.4	1.0	0.4
		0.7	1.6	0.1	1.0	0.0
		0.7	0.5	1.1	0.7	0.4
		0.3	0.0	0.0	0.3	0.9
	0.2	0.0	0.4	0.3	-	
		100.0	100.0	100.0	100.0	100.0

< 4-19> 가 (: %)

		(n=1005)	150~200 (n=185)	200~300 (n=283)	300~400 (n=302)	400~450 (n=235)
		54.1	57.8	61.5	51.0	46.4
(1)	가 · · 가	34.2	23.4	25.9	40.3	49.5
		32.0	47.7	36.8	26.0	17.4
		11.0	6.5	12.1	11.7	12.8
		5.3	4.7	7.5	5.2	2.8
		5.0	3.7	2.9	5.8	8.3
		3.5	5.6	4.0	3.2	0.9
		2.9	1.9	4.0	2.6	2.8
		2.2	1.9	3.4	1.9	0.9
		1.8	1.9	1.1	2.6	1.8
		0.7	-	0.6	0.6	1.8
		0.4	1.9	-	-	-
		0.4	-	1.1	-	-
		0.4	0.9	0.6	-	-
	0.2	-	-	-	0.9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융위기 이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재정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가구는 39.5%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 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54.1%, 200~300만원인 가구는 47.0%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부족한 생활비는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충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금서비스, 저축 등 해약 순으로 많았다. 친지에게 빌리거나 가족·친지가 무상지원한 경우도 24%로 많은 편인데, 특히 월소득 200만원 이하 계층에서 친지로부터 무상지원(19%)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이 계층에 고령자 가구가 많아,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31.8%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나 친지에게 또는 사채를 빌려 부채를 졌고, 8.6%는 저축이나 보험 등을 해약한 것이다.

< 4-20> 가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39.5	54.1	47.0	35.1	24.7
()	·	58.4	56.0	61.7	58.5	55.2
		24.4	25.0	24.1	23.6	25.9
	, ,	23.2	21.0	20.3	22.6	34.5
		16.4	18.0	17.3	11.3	20.7
	가 , 가	7.6	19.0	3.0	5.7	1.7
	가	2.8	5.0	-	0.9	8.6
	, ,	1.8	-	0.8	2.8	5.2
		1.5	2.0	1.5	0.9	1.7
	, ,	0.5	-	0.8	-	1.7
		0.3	1.0	-	-	-

3) 노후준비

90% 이상이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다. 노후대책 수단으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가 70.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저금·보험, 살고있는 집, 개인연금, 퇴직금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소득 200만원 미만 최하층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경우가 20%에 달하고, 공적연금에 가입한 비율도 45.4%에 불과하며, 그 외의 노후대책 수단도 거의 없어 다른 계층에 비해 특히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소득 400만원 이상 중상 계층은 모든 형태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채권 등을 가진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4-21>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7.5	20.0	5.3	5.3	3.0
()	•	70.7	45.4	71.0	75.8	83.8
		64.0	49.2	61.5	69.2	71.9
		55.3	42.2	51.2	56.6	68.9
		37.4	16.2	27.6	44.0	57.4
	•	25.7	7.0	26.1	29.5	34.9
		14.6	7.0	7.4	18.9	23.8
		13.2	5.4	7.4	10.6	29.8
		100.0	100.0	100.0	100.0	100.0

4) 주거상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43.5%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연립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많다.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나 중상계층은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는 반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비슷하게 많으며, 200~300만원 계층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전체의 56.5%이지만, 월소득 200만원 미만 중하계층은 41.6%인 반면, 400만원 이상 중상계층은 73.2%로 중산층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주택의 면적도 월소득 200만원 미만 최하층은 75.34㎡, 400만원 이상 최상층은 102.27㎡로 약 1.4배의 차이가 난다.

< 4-22>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가	25.4	33.5	29.7	25.5	13.6
		43.5	27.0	33.6	60.0	60.0
		27.4	34.1	32.5	20.5	24.7
		3.7	5.4	4.2	3.6	1.7
	가	56.5	41.6	51.2	57.6	73.2
		34.4	36.2	37.5	39.1	23.4
	/	2.7	6.5	3.9	0.7	0.9
		5.4	14.1	6.4	1.7	2.1
		0.9	1.6	1.1	0.7	0.4
	60㎡	21.7	42.7	26.9	13.9	8.9
	60~90㎡	33.2	28.1	43.5	35.4	22.1
	90~120㎡	32.7	21.1	20.5	37.7	50.2
	120㎡	11.4	7.6	8.8	11.6	17.4
	(: ㎡)	(88.5)	(75.34)	(80.87)	(93.12)	(102.27)
30	가 •	39.6	23.9	25.2	45.0	62.5

금융위기 이후 주거상황이 변한 경우는 7.8%로 적은 편이고, 그 중 1.4%는 오히려 더 좋아져 금융위기로 주거상황이 악화된 경우는 전체의 6.4%이다. 주거상황이 악화된 경우 집의 규모를 줄여 이사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자가에서 전세로 또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긴 경우도 많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최하층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긴 경우가 절반에 달하고, 400만원 이상 중상층 집단에서도 집의 규모보다는 소유형태 변화가 많아 자가에서 전세 또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긴 경우가 많다. 월소득 200~400만원 중간그룹은 살던 집의 면적을 줄인 경우가 가장 많다.

< 4-23>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6.4	7.6	7.8	4.6	6.0
()	가	32.8	14.3	54.5	35.7	14.3
		21.9	21.4	18.2	28.6	21.4
		20.3	50.0	9.1	7.1	21.4
	가	9.4	-	9.1	14.3	14.3
		7.8	14.3	4.5	-	14.3
		7.8	7.1	4.5	14.3	7.1

4.

1) 경제적 생활변화

금융위기 이후 체납, 체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세, 임대료, 관리비 등을 체불한 경험이 12%였고, 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 최하층에서는 27%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세금, 공과금, 이자 등의 체납 경험이 17.9%로 가장 많았는데, 월소득 150~200만원 계층과 200~300만원 계층은 각각 31.9%, 21.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용불량자가 생긴 경우도 월소득 200만원 이하 계층에서 7.6%에 달하였다.

< 4-24>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 ,	12.0	27.0	13.8	7.9	3.4
, ,	17.9	31.9	21.6	14.2	7.2
()	9.9	15.7	12.0	8.3	4.7
가	2.9	7.6	3.2	1.3	0.9

경제적인 이유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한 가족이 있는 경우가 2.6%이고, 결혼·출산 등을 미루거나 포기한 경우도 1.2%이다. 대체로 소득계층이 낮은 가구에서 이러한 경험이 더 많았다. 경제적 이유로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한 비율은 평균 5.9%인데, 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11.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중 고령자 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 4-25>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2.6	4.3	3.9	1.0	1.7
,	1.2	2.2	1.8	0.7	0.4
	5.9	11.9	8.8	3.0	1.3

2) 사회·문화생활 변화

금융위기 이후 사회·문화적 생활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외식이나 취미활동, 여행, 사회활동 등 문화생활을 적게 한다는 비율이 모든 계층에서 높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렸다는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적으로 중산층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건을 구비하여 체면치레할 정도의 교제를 하고 자녀를 대학에도 보내며 필요한 만큼의 문화생활도 하는 집단으로 본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이유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집단이 늘어나면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고 이는 중산층으로서의 소속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4-26>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67.2	67.6	68.6	66.6	66.0
,	59.1	58.4	64.3	59.6	52.8
	61.0	61.6	62.5	61.3	58.3
가	52.9	54.1	59.0	53.3	44.3
	46.8	51.9	53.0	47.0	34.9

3) 가족생활 변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족 간의 대화가 감소한 경우가 12.6%, 다툼이 늘어난 경우도 10.1%이다. 이혼이나 자살을 고려해 본 경험은 각각 5.5%와 4.4%이다. 모든 문제에서 월소득 300만원 미만 중하계층이 중상계층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 최하계층은 가족관계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27> 가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가	12.6	17.3	16.3	8.3	10.2
가 가	10.1	16.2	12.4	6.6	7.2
	5.5	7.6	8.5	3.3	3.0
가 가	1.9	2.7	2.1	1.3	1.7
	4.4	8.1	6.0	1.7	3.0

4) 사회적 지원체계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는 수입감소라는 응답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았고, 가족의 건강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 150~200만원 계층에서는 가정의 실직(7.0%)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활 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걱정이 없다는 비율은 월소득 400~450만원 집단(37.9%)이 150~200만원 집단(12.4%)의 3배에 달한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의논하는 상대는 배우자, 친구·동료, 부모·형제 순으로 높았으나,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6.8%이다. 특히 월소득 150~200만원 최하층은 11.4%가 의논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해 사회적 네트워크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부모·형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45.2%로 가장 많으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도 38.8%에 이른다. 이는 공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경제적 도움에 있어서는 오히려 월소득 200~400만원 중간계층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이 40%를 넘어 더 높았다. 이는 월소득 150~200만원 계층은 고령자 가구가 많아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4-28>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가	44.7	55.7	54.8	40.4	29.4
		15.3	18.9	14.1	15.9	13.2
		5.9	7.0	4.2	4.6	8.5
		2.9	1.1	2.1	4.0	3.8
	가	2.2	1.1	1.8	2.3	3.4
		1.3	1.6	1.1	1.3	1.3
		1.0	1.1	1.1	0.7	1.3
		24.9	12.4	18.4	28.5	37.9
	·	69.8	52.4	64.0	80.8	76.2
		10.6	17.8	11.0	7.0	9.4
	·	8.6	11.4	12.4	5.0	6.4
		2.0	3.8	3.5	0.3	0.9
		0.9	1.1	1.1	1.0	0.4
		1.2	1.6	0.7	1.0	1.7
		6.8	11.4	7.4	5.0	4.7
	·	45.2	36.8	43.1	46.7	52.3
		8.5	11.4	6.4	8.9	8.1
	·	2.3	6.5	1.8	1.3	0.9
		1.9	2.7	2.8	0.7	1.7
		1.4	2.7	1.4	0.7	1.3
		1.9	-	3.5	1.7	1.7
		38.8	39.5	41.0	40.1	34.0
		100.0	100.0	100.0	100.0	100.0

5.

1) 생활만족도

현재 및 미래의 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여 월소득 150~200만원 계층은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더 많았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나 현재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40%를 넘어 중상계층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29> 참조).

미래에 대한 의식은 모든 계층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긍정 정도가 다소 낮기는 했지만, 향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나 기대수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보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표 4-30> 참조).

< 4-29>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45.4	26.5	37.8	49.3	64.3
	41.2	44.3	45.9	43.4	5.5
	13.3	28.6	16.3	7.3	5.5
	36.9	15.7	29.7	39.4	59.1
	42.4	39.5	43.5	50.0	33.6
	20.6	44.3	26.9	10.6	7.2
	35.9	18.4	28.3	41.7	51.5
	41.9	37.3	45.9	44.7	37.0
	22.1	43.8	25.8	13.6	11.5
	100.0	100.0	100.0	100.0	100.0

< 4-30>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69.3	50.8	62.5	76.5	82.6
	24.4	34.1	28.6	21.5	15.3
	6.3	14.6	8.8	2.0	2.1
	69.0	49.2	64.3	75.5	81.7
	24.7	34.6	26.9	23.2	16.2
	6.3	15.7	8.8	1.3	2.1
	80.9	67.0	78.4	84.1	90.6
	15.7	25.4	15.5	15.2	8.9
	3.3	7.0	6.0	0.7	0.4
	100.0	100.0	100.0	100.0	100.0

2) 주관적 계층의식

현재 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중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3%로 가장 많고, 중하라고 여기는 비율이 37.7%로 그 다음으로 많다. 본인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12.1%이다. 특히 월소득 150~200만원 집단의 31.4%가 스스로를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 4-31>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0.2	-	-	0.3	0.4
	6.8	0.5	4.2	8.3	12.8
	43.0	20.0	35.0	47.4	65.1
	37.7	48.1	45.6	38.4	19.1
	12.1	31.4	14.8	5.3	2.6
	100.0	100.0	100.0	100.0	100.0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전후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를 보면, 외환위기 때보다 금융위기로 인한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락한 비율은 전체의 25.2%인데 비해, 금융위기 이후는 13.8%로 절반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이후 해당 계층에서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 상 또는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던 집단의 75%와 61.2%가 외환위기 이후 해당 계층에서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전형적 중산층인 화이트칼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4-32>

(: %)

	-	25.0	75.0	-	66.7	33.3
	0.7	38.1	61.2	-	65.1	34.9
	4.3	70.0	25.7	2.7	81.9	15.4
	12.0	82.0	6.0	3.2	87.4	9.5
	5.0	94.8	-	4.8	95.2	
	5.6	69.2	25.2	2.8	83.5	13.8

6.

1) 복지사업 인지도 및 욕구

취업 및 창업지원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고, 이용희망은 20% 내외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소득 150~200만원 중하층은 각 사업에 대한 이용욕구는 가장 높은 반면, 다른 집단에 비해 사업인지도는 낮아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4-33> 참조).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취업·창업지원 사업 인지도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가족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다. 이용욕구도 취업·창업지원 사업욕구에 비해 낮은 편이나,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14%가 이용을 희망하였다. 월소득 150~200만원 소득계층은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일시보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저소득 가구일수록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표 4-34> 참조).

(: %)

* 6 3 6 3

(: %)

* 6 7 6 7

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욕구는 소득계층보다도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여성가구주 가정은 가정상담이나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남성가구주 가정은 지역아동센터, 교육비 보조 등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욕구가 높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높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교육비·보육비 보조에 대한 욕구는 25%를 초과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36> 참조).

< 4-35>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24.0	9.7	25.8	25.8	30.6
	가	51.9	50.0	49.3	57.7	48.6
		32.0	22.2	37.0	29.5	31.9
		7.1	11.1	5.5	6.4	8.3
		5.0	-	4.1	3.8	8.3
		1.2	5.6	1.4	-	1.4
		1.2	5.6	2.7	-	-
		0.4	-	-	-	1.4
		0.8	-	-	2.6	-
		20.1	13.5	19.8	21.9	23.4
	가	75.7	76.0	89.3	72.7	65.5
		17.3	8.0	8.9	21.2	25.5
		4.0	8.0	1.8	3.0	5.5
		2.0	4.0	-	1.5	3.6
		1.0	4.0	-	1.5	-
		100.0	100.0	100.0	100.0	100.0

< 4-36> 가 가

(: %)

		가	가	,		,
가		12.2	7.2	13.0	8.4	14.4
		14.1	11.8	7.1	7.1	10.6
		10.2	6.3	8.9	6.3	10.7
		14.1	8.6	15.6	9.9	16.9
		15.1	11.3	25.5	16.1	25.8
		10.7	5.4	4.9	3.6	7.1

한편, 서울시가 2008년 10월 발표한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조사대상 가구가 중산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의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의 이용욕구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희망플러스 통장에 대한 욕구는 21.3%에 달한다. 특히 중하층인 월소득 150~200만원 가구와 200~300만원 가구는 각각 24.3%, 24.4%의 욕구를 보였다.

<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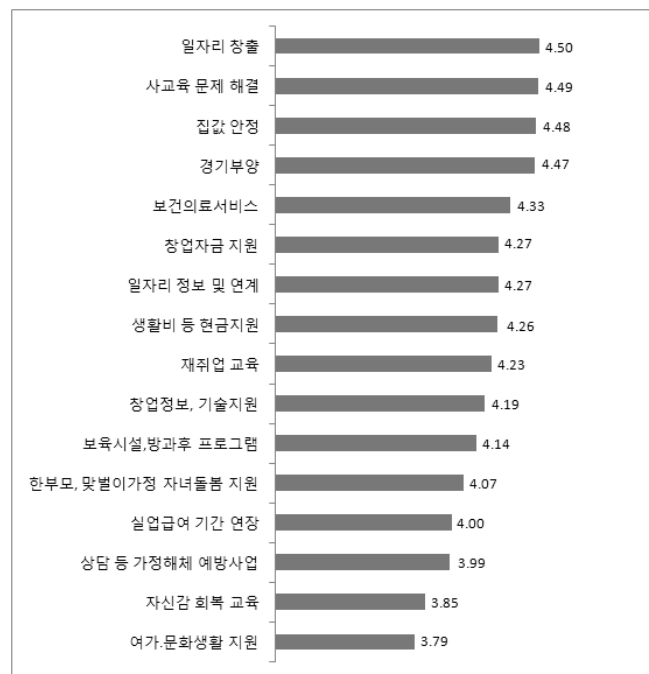
(: %)

			150~200	200~300	300~400	400~450
		38.4	31.3	39.2	40.7	40.0
		21.3	24.3	24.4	18.9	18.3
		25.7	23.2	26.2	25.8	26.8
		15.7	17.8	15.2	15.2	15.3
		29.9	26.5	32.2	28.8	31.1
		15.9	17.3	16.3	15.9	14.5
SOS	가	32.5	27.1	31.8	34.7	34.5
		12.4	17.8	13.1	8.6	12.3

* 이 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 중산층 정책 우선순위

마지막으로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의 일반적인 필요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4점 이상을 주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사교육 문제해결, 집값안정, 경기부양 순으로 필요도 점수가 높았다.



* = (5)~ (1) 5

< 4-1>

그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 사교육 문제해결, 집값안정, 일자리 창출 순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생활비 등 현금지원에 대한 요구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다소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 이는 빈곤층과 달리 중산층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계지원보다는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자녀교육 문제, 집값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회문제 해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4-38>

(: %)

		150 200	200 300	300 400	400-450
	23.9	24.9	23.3	20.5	28.1
	18.0	5.9	14.8	22.5	25.5
	13.1	10.3	14.1	14.2	12.8
	13.0	20.0	11.0	12.6	10.6
	9.0	12.4	8.5	8.9	6.8
	6.0	10.3	7.1	4.6	3.0
	5.3	4.9	7.4	4.3	4.3
	2.1	3.8	2.5	2.3	0.0
,	1.9	0.0	2.1	3.0	1.7
.	1.8	2.7	2.5	1.3	0.9
	1.6	2.2	1.8	2.0	0.4
,	1.0	0.5	2.1	0.7	0.4
,	0.8	0.0	1.1	1.0	0.9
가	0.7	0.5	0.4	1.0	0.9
가	0.7	0.0	0.4	0.3	2.1
	0.5	0.5	0.4	0.3	0.9
	100.0	100.0	100.0	100.0	100.0

7.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지난해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에 미친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고용조건이 악화되거나 실직이나 해고 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의 한계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중산층에 남아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탈락한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결과에서 금융위기의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업이나 고용환경 변화 등은 크지 않은 반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중산층 가정의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31.1%가 수입이 감소하였고, 39.5%가 지출보다 수입이 적어 적자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 수입감소로 인해 54.1%는 생활비를 줄였으며, 추가적으로 부채가 생긴 가구도 31.8%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관계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중산층으로서의 사회·문화생활도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족, 사회, 문화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관적 계층의식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인 중산층의 12%는 스스로를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산층은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안정된 집단으로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집단 간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적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 빈곤감이 증가하여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기 이후 일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2) 한계중산층 문제

이번 조사를 통해 특히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 중하계층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위험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한계중산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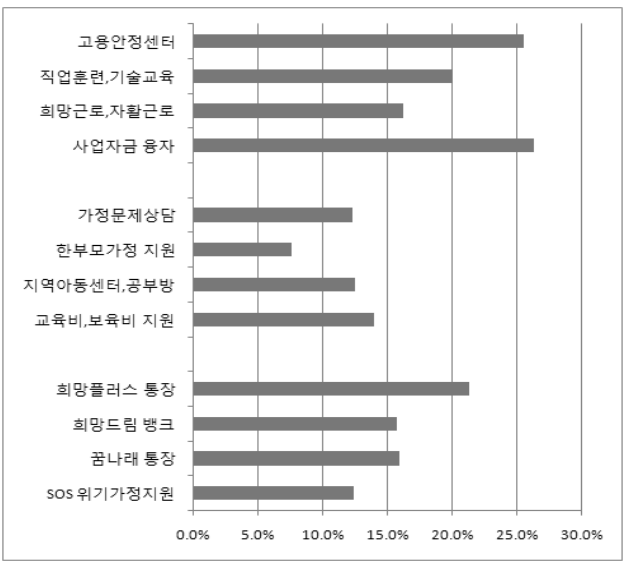
한계중산층은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 월세 등의 체불(27%), 공과금 체납(31.9%), 학비 체불(15.7%) 등의 경험이 많고,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경우도 7.6%에 달한다. 사회·문화생활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가족관계가 악화된 경험도 중하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고 사회·경제적인 지원체계도 중산층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고령자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병원이용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11.9%에 달하고, 아무런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가구도 20%에 이른다. 여성가구주의 자녀양육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중산층 지원에 있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한계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들 한계중산층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할 기회가 없거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 중하계층은 여성가구주가 많고, 연령이 높으며 교육수준은 낮다. 또한 사별 또는 미혼상태의 1인가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을 중산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는 결국 가족문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자 및 여성가구주가 많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와 가족지원서비스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중산층의 복지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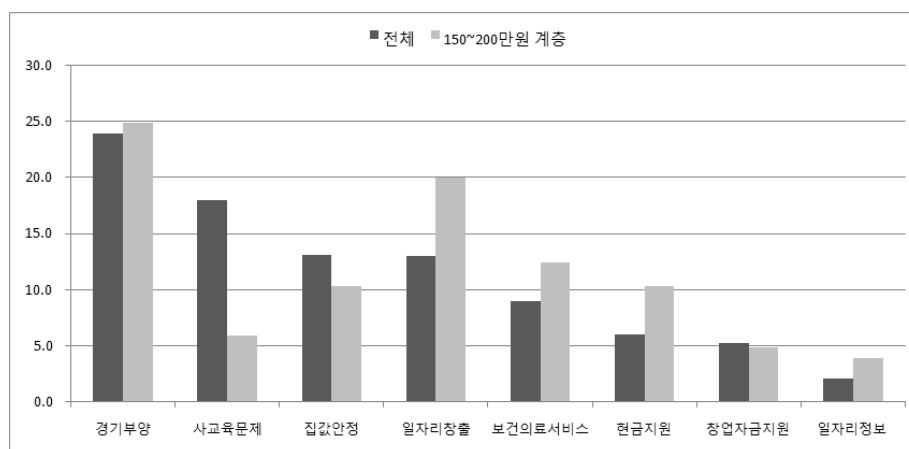
현재 추진 중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취업·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욕구가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중하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이용욕구는 더 높다. 이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지원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성은 떨어짐을 시사한다.



< 4-2>

취업·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이용욕구는 20% 내외 수준이다. 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욕구는 소득수준보다 가구 및 개인특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응답자가 여성이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교육비 지원, 가족상담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즉, 가족지원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특성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할 영역임을 의미한다. 서울형 복지사업인 희망드림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용희망은 20%대 수준에 달한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교육 문제 해결, 집값 안정, 경기부양,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본인 가구에 필요한 도움으로는 경기부양, 사교육 문제해결, 집값안정, 일자리 창출 순으로, 대답하여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결국, 중산층의 유지·복원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경기부양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적 문제인 사교육과 주택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한계중산층 집단의 경우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사교육비나 집값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 집단에 고령자 가구가 많아 교육비보다는 의료비가 더 부담되는 지출항목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4-3>

한편, 생활비 지원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편이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한계중산층 집단에서 현금지원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현금지원보다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요구가 더 높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생계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중산층 스스로도 단순 현금지원보다는 경기부양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더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중산층의 문제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일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중산층 붕괴를 막고 빈곤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 사업을 이용한 소득이전 방식이 아니라 노동과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고용정책이 핵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5장 한 계 중 산 층 의 실 태 와 진 단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한 계 중 산 층 의 실 태 와 문 제

제3절 유형별 문제의 진단

제 5 장

한계중산층의 실태와 진단

제1절 조사개요

1.

제4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중산층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한계 계층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대상은 현재 중산층에 남아있는 계층으로 한정되고, 조사내용의 구체성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산층 가운데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은 한계중산층과 이미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의 문제요인과 복지욕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의 문제를 확인하고 유형화함으로써 문제유형 집단별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중산층으로의 복원을 도와줄 사회·경제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대상자는 1997년 12월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사시점 동안에 중산층(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450만원)에서 저소득·빈곤층으로 전락했거나 가구소득이 1/3 이상 감소한 가구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 제한하였다.¹⁰⁾ 또한 중산층의 사회적 특성에 맞추기 위해 연령은 30대~50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며, 개인보다는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

10) 심층면접조사 초기에는 최근 3년 동안 경제상태가 변화한 가구로 제한했으나, 최근에는 외환위기 당시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적합한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였다.

· 경제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는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연대은행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을 이용한 구직자와 창업준비자 가운데 선정하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 종사자의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추천을 받아 스노우볼(snow-ball)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7명, 사회연대은행 3명, 지역자활센터 6명, 자치구의 취업정보센터 2명, 성북주거복지센터 2명, 서울신용보증재단 1명, snow-ball 방식으로 9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 30명의 일반특성은 <표 5-1>과 같다.

< 5-1>

1	○		55	
2	○		50	
3	○		58	
4	○		49	
5	○		46	
6	○		41	
7	○		51	
8	○		47	
9	○		54	
10	○		46	
11	○		46	
12	○		50	
13	○		56	
14	○		54	
15	○		45	
16	○		38	
17	○		50	
18	○		40	
19	○		52	
20	○		38	
21	○		46	
22	○		48	
23	○		52	
24	○		55	
25	○		49	
26	○		52	
27	○		48	
28	○		53	
29	○		48	
30	○		51	

3.

심층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원 2인을 한 조로 구성하여 조사와 정리를 함께 하도록 하였으며, 정리는 조사 당일에 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 1인당 2회의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1차 면접조사 후 최소 2일이 경과한 다음에 2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가족관계, 경제상태, 생활실태 등 개인적인 형편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기억을 되살려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조사원이 1차 면접내용을 정리하면 연구진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내용 중에 보완할 부분과 누락된 사항들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사원이 2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 5-2>

	- , , ,
	- , 가 , , , ,
	- , , (), , 가 , 가
	- (, ,) ,
	- 가
	- (, , , ,), (,), (/ /), ,
	- , ,
	- 가
	- 가
	(), , , , , , , (, 가),
	.
	- , , , /
	- (, ,), /
/	- (), ,
	- . 가 , 가 / , .
.	- . /
	: ?, ? , ?
- IMF	: ?, ? , ?
- :	가 , 가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가 / , /
	- 가 : ? , 가 ? , 가 ? , ?
	< : >

조사내용은 대상자 및 가구의 일반사항, 주거실태 및 재산감소, 경제활동, 과거와 현재의 소비실태, 사회적 네트워크, 금융권/비금융권 대출,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경제상태 악화의 시기 및 원인, 희망취업 및 창업, 사회복지 욕구, 심리적 상태, 희망정책 등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5-2>와 같다.

제2절 한계중산층의 실태와 문제

1.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6.7%, 여성 43.3%이고, 연령은 50대(50.0%)와 40대(43.3%)가 대부분이다. 혼인상태는 기혼(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50.0%, 이혼 33.3% 순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53.3%), 대학교 졸업(23.3%), 전문대학 졸업(10.0%) 순이다. 조사대상자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가구규모는 4인 가구(50.0%)와 3인가구(36.7%)가 대부분이고, 가구원 중에 요보호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56.7%에 달한다. 주택점유형태는 전세(40.0%), (보증부)월세(33.3%), 자가(16.7%) 순이다.

< 5-3>

(: , %)

		17	56.7
		13	43.3
	30	2	6.7
	40	13	43.3
	50	15	50.0
	()	15	50.0
		1	3.3
		9	30.0
		1	3.3
		2	6.7
		2	6.7
		16	53.3
		3	10.0
		2	6.7
		7	23.3
		1	3.3
		1	3.3
		30	100.0

< 5-4>

가

(: , %)

가	2	3	10.0
	3	11	36.7
	4	15	50.0
	5	1	3.3
가	1	12	40.0
	2	4	13.3
	3	1	3.3
		13	43.3
	가	5	16.7
		12	40.0
	()	10	33.3
		3	10.0
		30	100.0

2.

1) 경제활동 및 소득

(1)

조사대상자의 최초 직업, 직전 직업, 그리고 현재 직업을 비교하면, 최초직업 및 직접직업 종류로 사무·관리직, 사업체·자영업 운영자 등이 많았던 반면, 현재 직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자영업, 노무직 종사자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상당수가 전형적인 중산층인 사무직·관리직으로부터 자영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 등으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5-5>

/	9 (30.0)	4 (13.3)	-
	2 (6.7)	-	-
	4 (13.3)	7 (23.3)	5 (16.7)
.	7 (23.3)	7 (23.3)	7 (23.3)
	1 (3.3)	1 (3.3)	-
	-		3 (10.0)
	-		7 (23.3)
(/)	-	5 (16.7)	7 (23.3)
가	7 (23.3)	6 (20.0)	1 (3.3)
	30(100.0)	30(100.0)	30(100.0)

이 중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경우는 회사원(사무·관리직)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에 대부분은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직한 후 일정 기간의 준비를 거친 다음에 창업·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한 사람 중에는 1년 넘게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상태가 불안한 일자리가 많은 데 비해,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아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 → → ○ , , 55
1983
. , IMF
. 8
가 . 3

4
3 , 2009 3
→ (1) → ○ , , 46
5
150 , IMF 1997 12 1
가 1999
100 ~300 . 10
가

취업을 한 사람 중에는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 경우마저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현재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 → → ○ , , 54
가 1983
, 2000
400
가
80

IMF 구제금융기에 실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니던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퇴직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도 개인사업을 창업한 경우가 있었으며, 현재 40세 전후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새로운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도 있었다.

→ → → ○ , , 38
, 2004
2006 3
. 2009 5
“ 가 , () ,
.... 120
140

‘2030 , 1
.”
→ → ○ , , 40
7 가, 5
2008 ,
.

여성 중에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 취업을 하였는데, 창업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 , , 52
2004
‘ , , 5
, 70 . “ ,
..... , 가 ,
.”
○ , , 51
가 10 . “ 3
가 1 , 23
2008 ,
.” 7
1 , .

(2) 가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혼(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인 경우 거의 모든 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 , - ○ , , 47
1996 2001 , IMF . 2005
300 . 2 8
1/3 .
, .

- ○ , , 51
, 5 . IMF
가 .
가
. 2008
, 180 .

- ○ , , 48
“ 가 가 . 10 ,
. 가 .
.”

• - ○ , , 50
, IMF
가 250
가 , 1
3 .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이 집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미성년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 , , 38
. 1
가 .
가 ‘ (.)
.

○ , , 46
3
“
.....
40 3 , .
.”

2) 가계실태

(1)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기 전에는 교육비(특히 사교육비), 여행·문화비, 외식비 등의 지출이 많았고, 당시에는 이러한 지출은 큰 부담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인 상태였다. 특히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 중에는 여행·문화비, 외식비 등 외출형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자녀교육비, 주거비, 부채에 대한 이자, 의료비, 교통·통신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았다. 자녀교육비는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로 나눌 수 있는데, 대학생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가 등록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도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상당수 있었다.

○ , , 50
가
2 가
“ 가
2
.....
가 7% ?”

○ , , 47
가 가 가
가
IMF
가 가

○ , , 38

가

“ 가 가

가

가 가

.”

보증부월세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절반 정도가 월임대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46

가

25

가 가

가 가

○ , , 46

가

.”

가

.

.”

70

33

가

가

.”

.”

가구원 중에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 교통·통신비 등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 , 58

가

가

가

○ , , 41

가 . “ 2 , 가 . ”

20 가 가 .

가 ○ , , 48

“ 가 가 , .

가 .

가 5 . ”

(2)

조사대상가구 중 많은 가구가 주택을 처분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택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기가 5년 이상 경과한 가구는 현재까지 주거상황이 과거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 , , 50

76㎡(23) 5 1 .

60㎡(18) 8 .

가 ○ , , 50

가 가 3 , 66㎡(20) 2 가

2 4 79㎡(24)

8 .

IMF 2003 , 2008

가 ○ , , 54

1 30 109㎡(33)

3 ~4 2 ,

165㎡(50)가 1·2

가 7 . 3,306㎡(1)
가 가 .
가

가 ○ , , 51
() 2004 3
, 36㎡(11)
2 가 , 500 35 .

가 ○ , , 50
10 5 .
, 56㎡(17) 25

(3)

조사대상가구 중에 부채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23가구, 76.7%)이 금융기관, 친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주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부동산담보대출, 채무변제를 위한 대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위한 학자금 대출 등이 많았다.

○ , , 53
2008 3 5 ,
130 . “ ,
.” 2008 11 7
, 5 .
○ , , 47
, IMF .
2 8
. 가 1/3 100 .

○ , , 52

2 , 2
가

2 ○ , , 40

5 8%

30 . “ (1)

, 2 6 9 .
....

, .”

조사대상자 중에는 소비자파산제도에 의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가 2명이 있었는데, 이중에 1명은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사채를 빌려 쓴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여성가구주의 상당수가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친지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었다.

○ , , 50

1998 5

2005

, 가 . “
가 .”

1 .

IMF ○ , , 38

IMF 7 . “

.... .

, 1 .
50 가 .”

○ , , 51

. 8
.“

250
350 가 .”

(4) .

가정경제 악화로 인해 신용불량, 제세공과금의 체납, 자녀의 학업 중단, 각종 요금의 연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에 사업을 하던 2명이 소비자파산제도에 의한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고, 1명은 현재 신용불량상태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 , , 50

, 가 .

○ , , 46

2005

400

가정경제가 악화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과거에는 체납을 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가 ○ , , 50

가가 . “

가 .”

○ , , 40

가 . “ 가 , 가

8 .”

○ , , 52

70

가 2
3
가

조사대상자 중에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자녀가 휴학을 한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다니고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높은 대출이자가 가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임대료와 관리비, 통신비 등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 , 50

1

○ , , 45

2009 1

○ , , 38

가 가

가 “ 가

가 ”

3.

1) 가정해체

조사대상자에 속하는 이혼한 10가구 중에 일부는 이혼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가구가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가구는 부채문제로 인해 가족이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였다.

가 : ○ , , 46

가

6

1

가 : ○ , , 46

가 가

가

.”

3

가

.”

가 : ○ , , 46

가

1

1

가,

○ , , 58

2) 사회적 네트워크

많은 경우 친지들과의 만나는 횟수가 감소하고, 친지들 중에서도 자주 만나는 집단이 변하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이 길면 친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상황 및 처지가 비슷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49

가

2~3

가

가

가

○ , , 58

.”

가 . 20~30 , 2~3

.”

○ , , 54

“

.” 가

가

가 ?

....”

○ , , 46

가

“

....”

그러나 상당수는 저소득·빈곤층으로 전락하고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지들로부터 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등 사회적 관계가 강화된 경우도 있었다.

○ , , 50

가 가

가

3) 심리적 변화

조사대상자 중에 절반 정도는 긍정적·낙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재기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었다. 현재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도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거나, 세계경제

위기 또는 국가경제위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부는 정부에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 , , 55

1. 가 , 가 .

○ , , 52

가 . “ .

. ,

가 .

, 가 ,

가 .”

○ , , 46

○ , , 48

“가 , 가 가 ”

가 , 가 , 가

”

“ ○ , , 53
가 . ‘ ’
 ,
가 , 30
.
.
○ , , 49
가 .
가 .
.
가 ○ , , 46
가 .
가 .
가 “
 , 100 ”
○ , , 49
“ .
가 ”
“ 가 ,
.”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계층을 평가했을 때,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가 계층이 하락했다고 평가하였다. 아직까지는 중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소수였고, 대부분이 하층으로 하락했다고 응답하였다. 계층을 9단계(상상층~하하층)로 구분했을 때, 모두 2단계 이상 하락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변동을 보인 경우는 ‘중상층 → 하하층’, ‘상하층 → 하상층’, ‘중중층 → 하하층’ 등으로 4단계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51

“IMF
15 가 ,
가 .”

→ ○ , , 40

2008
가 .

→ ○ , , 53

2000
“
가 IMF
30% IMF
IMF , 400 IMF
”

→ ○ , , 47

IMF
IMF 가 “
가
”

→ ○ , , 52

2000
“
가
가
”

”

“

가

“

“

□ □ □ □

“

주거지원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희망하였고, 주거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희망하였다.

○ , , 41

가
가

가

○ , , 46

가

.80

가

가

18

“

”

가

가

가

○ , , 46

“ 100

30

, 30

가

가

”

(2)

조사대상자 중에 현재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시킬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교육문제는 개인인 부모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했는데,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저리의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제도의 확대를 원하고,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사교육비에 대한 지원, 체계적인 방과후학교 실시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 , , 52

“

, 가

○ , , 55

“ , 가 . ”

(4)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요건의 완화, 근로유인책의 완화와 같은 현행 빈곤정책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점인 ‘All or Nothing’의 급여체계를 보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가급여를 확대하고, 생산적 복지의 취지에 맞게 근로유인책을 확대할 것을 원하고 있었다.

○ , , 38

“ , 가 가 . ”

○ , , 50

가 . “ , . 가 가 . ”

○ , , 54

「
가
○ , , 38
“ 가 , 가 가
가
? 가가 ,
.”

2) 경제활동 관련

(1)

조사대상자에게 희망하고 있는 취업 및 창업에 대해 알아본 결과, 취업보다는 창업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구상 중이며, 짧은 시간 내에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업경험, 직업훈련 또는 취미로 배운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려고 구상·준비하고 있었다.

○ , , 55
2~3
가
“
.”
○ , , 38
‘2030
“
, 200
.”

○ , , 46

○ , , 46

가 . “ 가 가
가 150
.”

취업을 원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대부분이 현재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였는데, 대다수가 50대의 장년층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의 직업경험을 살려 취업을 하기에는 다소 나이가 많은 관계로, 주로 단순노무직 일자리 외에는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 , , 56

가
가
가

장년층이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조사대상자 가운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중에는 현재 경영이 어렵기는 하지만,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 , , 55

“ 가

○ , , 51

“
가
가 가

(2)

조사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정책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취업관련 지원정책으로는 일자리 확충,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취업알선의 실효성 제고 등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일자리 확충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삼류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을 바라고 있었다.

, ○ , , 58

○ , , 48
“
3D
?”

○ , , 49

,
가 가

사업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금 용자 요구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대출기준과 대출조건의 완화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 , , 51

가

“

가

○ , , 50

○ , , 41

가

가

가

○ , , 51

1%

5.

1) 생애 히스토리

조사대상자 개인 및 가구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직업활동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요 사건별 생애히스토리를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 5-6>

○		55	→ IMF → → 2009 → → ()
○		50	→ → 1 1 → IMF → → () →
○		58	→ → → 9 → 가 → IMF → → → 가
○		49	→ 1990 → 2008 → 2009 6 →
○		46	→ → IMF → → 1 → 가 →
○		41	→ → → () → ,
○		51	→ → → IMF → IMF → (가 → 3) → , → IMF , 가 →
○		51	→ → → 가
○		47	→ 가 → IMF → → 2005 → 4 → 3-4 → →
○		54	→ ' ' → → 가 → → → → → , →
○		46	→ IMF → IMF → 가 → , → →
○		46	→ → IMF → 1, 2 → 가 → 가
○		50	→ IMF → 2003 가 → → 2004 , →
○		56	→ → →
○		54	3 → → → → 가 → 가 → 2 → → ,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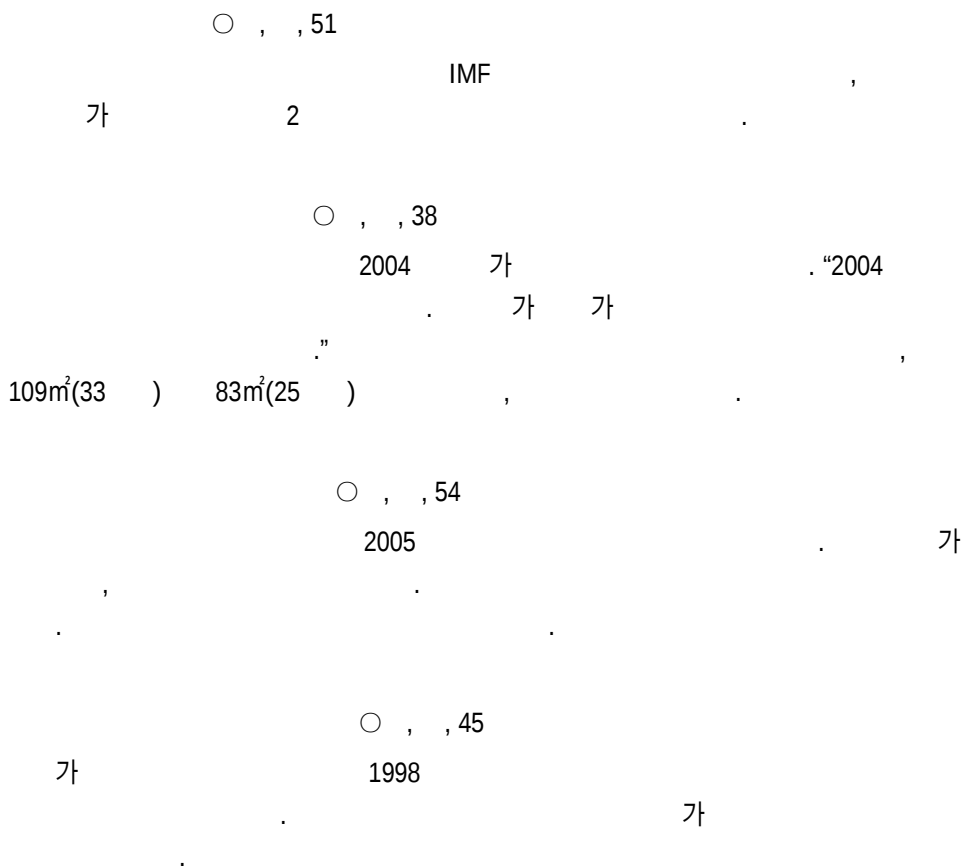
< >

○		45	→ → → → →
○		38	→ 2004 (, ,) → '2030
○		50	→ 가 → → 10 → IMF → 가 → 2005 →
○		40	→ → → → →
○		52	→ → → IMF → → 10 →
○		38	→ → 가 → IMF → → →
○		46	→ → → → IMF → → →
○		48	→ → → → → → 가 → 4 , 3 → → → 2008 10 →
○		52	→ 가 → → 가 → → 가
○		55	→ IMF → → → 가 7 → → →
○		49	→ → 2 → → (,) → → 가 → 2005 → →
○		52	→ → 2003 → → IMF
○		48	→ → IMF → 2001 →
○		53	→ 30% → →
○		48	가 → 1 → , 가 → 가 →

2) 경제상태 악화원인

생애히스토리를 토대로 조사대상가구의 경제상태가 악화된 원인은 가구주의 실직(퇴직 포함), 사업의 부진(휴·폐업, 매출액 감소 포함), 그리고 가구주와의 이혼 또는 사별, 기타 개별 가구의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가구주가 실직하는 경우에 많은 가구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저소득·빈곤층으로 추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최장 8개월뿐이고, 상당수의 실업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마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취업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 이는 실직자에게 새로운 직장 또는 직업을 알선하는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가구주가 경영하던 사업체 또는 자영업이 휴·폐업하거나 부진(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제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IMF 구제금융기 또는 2008년 경제위기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IMF ○ , , 38
 가 IMF . “IMF
 25 가
 , 가 IMF 가
 , 300 40
 4 가 .”
 , 가 가 가

2008 ○ , , 40
 2009 5
 가
 . “ 가
 , 가 가
 2
 가 .”

2008 ○ , , 53
 10 2008
 . “ 가
 30%
 . 2008 11 , 7 ,
 5 .”

가구주와의 사별 또는 이혼도 경제상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의 경우 남편과의 사별·이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주요 요인이다. 가구주가 불치병 등으
 로 사망하면서 급격하게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경우도 있었다.

○ , , 48
 가 . “
 250 , 가
 . 가 가 가
 1,500 .” 2008 10 ,

○ , , 52

가

가

2

기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다단계사업에 빠져 부채를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빚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되어 한순간에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 , , 56

1979

가

10

가
가

가

가

, 2008

3) 시사점

조사대상자들이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점은 대체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려워진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문제상황에 놓여있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때 명퇴한 후 사업실패로 재취업했으나 2009년 상반기 임금체불로 자발적 실업을 선택한 경우(김○동, 남 55세),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2008년말 구조조정을 당한 사례(박○환, 남 49세) 등이 있다. 이는 제4장에서 작년 금융위기 이후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고용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가구경제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와 같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는 대부분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 당사자의 경제활동 경로는 i) 자영업 → 영업부진 → 사업실패(43.3%), ii) 취업 → IMF 때 실직 → 사업, 자영업 → 사업실패(20%), iii) 취업 → 실직(13.3%)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즉, 실직보다는 사업실패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화이트칼라가 실직후 특별한 기술이 없이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또는 이전부터 영세자영업자였던 계층이 경기침체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비경제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경우 질병·장애·사고(8사례, 26.7%), 빚보증·사기당함(2사례, 6.7%) 등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사별(4사례, 13.3%) 등이 빈곤을 유발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56.7%가 가구원 중 자녀나 노인 등 요보호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과 함께,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저소득 가구의 자활·자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취업이나 창업 등을 계획하고 있고, 이들이 희망하는 복지욕구도 창업이나 취업지원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아 한계중산층의 탈빈곤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나 노부모의 부양, 자녀의 교육비 부담, 월세 등 주거비 부담 등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탈빈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유형별 문제의 진단

1.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상태, 요보호가구원 유무, 경제활동상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I유형은 ‘비교적 건강하고, 재기·자활 장애요인이 적은 중·장년층’이다. 상대적으로 가족문제가 적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체 또는 영세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자영업을 통해 충분히 재기·자활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즉, 재기·자활하는 데 있어 현재의 여건이 가장 양호한 유형이다.

제II유형은 ‘비교적 건강하고 재기·자활욕구는 있으나, 재기·자활 장애요인이 있는 장년층’이다. 이들은 30대~40대로 재기·자활의지와 근로능력은 있으나, 노인 등 요보호가구원에 대한 보호 및 보육 등의 가족문제가 재기·자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녀 보육, 노인 및 만성질환자 보호·간병 등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취업 및 창업문제가 해결된

다면 이들도 재기·자활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제Ⅲ유형은 ‘재기·자활욕구는 있으나, 취업 및 창업이 곤란하여 공공의 지원 또는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한 중년층’이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50대로 나이가 비교적 많은데다 건강 문제도 있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반해 이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집단이다.

< 5-7>

			/가	
	9	· (30 ~50)	- 가 - 가	- -
	7	· (30 ~40)	- 가 - 가	- 가 · · -
	6	가 50	- -	- - -
	8	가 · 가 · (40 ~50)	- 가	- - -
: , , 가 가 .				

마지막으로 제Ⅳ유형은 ‘건강문제가 재기·자활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중·장년층’이다. 이들은 40~50대로 가족문제 등으로 인해 재기·자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장기간 유지하기가 곤란하며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많았다. 재기·자활 여건이 4가지 유형 중 가장 열악한 유형이다.

2.

1) I 유형

비교적 건강하고 재기·자활장애요인이 적은 중·장년층인 I유형은 가정문제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총 9명 중 5명이 수입은 불안정할지라도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2명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1명은 창업을 준비 중이며, 1명은 남편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 중 4명이 부채문제가 있었으나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4가구가 주거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모 또는 아내가 있는 경우가 2명이었지만, 이 문제가 이들에게 소득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재기·자활에 결정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가구들이 재기·자활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임금노동자로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의 알선,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의 강화 등이 필요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금의 융자,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5-8> I

		가	
○ , , 50	- ()	-	-
○ , , 49	-	-	-
○ , , 46	-	-	-
○ , , 46	- ()	-	-
○ , , 40	-	-	-
○ , , 52	-	-	-
○ , , 48	-	- : ()	-
○ , , 53	-	-	-
○ , , 51	-	-	-

2) II유형

제II유형은 30~4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재기·자활욕구와 근로능력은 있지만, 가구원 부양, 자녀 보육 등의 가족문제로 인해 재기·자활이 쉽지 않은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 중에 3명은 만성질환을 가진 부모 또는 남편이 있고, 2명은 미취학·취학자녀의 보육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기타 개인파산 선고, 가벼운 언어장애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부모가정이 3가구이고, 많은 가구가 부채문제와 주거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부채문제가 있는 가구의 경우 경제적 보유자산이 부채보다 적어 재기를 통해 중산층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유형에 속한 가구에게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가구소득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5-9>

		가	
○ , , 41	-	-	-
○ , , 46	-	-	-
○ , , 38	-	-	-
○ , , 50	-	-	-
○ , , 38	-	-	()
○ , , 46	-	-	()
○ , , 48	- 가	- :	-

3) Ⅲ유형

제Ⅲ유형은 재기·자활욕구는 있으나, 고령이나 건강문제로 취업 및 창업이 곤란하여 공공의 지원 또는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한 50대이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았다. 4가구가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며, 이들 중 3가구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 유형에 속한 가구들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문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부채, 교육비 등의 문제로 생활이 어렵지만,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하면 가정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가구들이다.

이 유형의 가구에게는 가계부담 경감조치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특히 근로유인책의 확대를 통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자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들

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장학금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5-10>

		가	
○ , , 55	-	- : -	-
○ , , 58	-	-	-
○ , , 56	-	-	-
○ , , 51	-	- : ()	-
○ , , 54	-	-	-
○ , , 52	-	-	-

4) IV유형

제IV유형은 본인의 건강문제가 재기·자활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40대~50대이다. 이들은 가족문제 등으로 인해 재기·자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 중에는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구주가 5명이나 되었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을 걱정하고 있는 경우가 4가구이고, 그 중에 1가구는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였다.

< 5-11>

		가	
○ , , 48	- , -	-	-
○ , , 47	- (4)	-	-
○ , , 50	-	- : ()	-
○ , , 54	- . -	- ()	-
○ , , 45	- (3)	- -	-
○ , , 55	- -	-	-
○ , , 49	- ,	-	-
○ , , 52	-	-	-

이 유형에 속한 가구는 가구원의 소득활동을 통해서 재기·자활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건강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리의 학자금 대출 및 취업후 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장학금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정책제언

제2절 결어

제1절 정책제언

1.

1) 정책대상 :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유사한 추이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두 개념이 혼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 지표는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정책방향에도 차이가 있다. 소득불평등 관점은 소득격차와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해결이 핵심적 과제이다. 반면, 소득양극화는 중간계층의 해체가 주요 문제로, 중산층의 유지·복원이 정책적 관심이다.

앞서 분석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층도 더 이상 안정된 집단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산층의 붕괴는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산층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산층의 감소는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장기반 붕괴로 이어져 경제침체 악순환도 초래한다. 중산층이 두텁고 안정적인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중산층 위기시대에는 소득불평등뿐 아니라 소득양극화도 함께 관리해야 하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복지정책 대상을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의 안전망을 기본전제로 하고 여기에 중산층까지 복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을 의미한다.

우리의 복지체제는 국가의 복지기능을 최소화하여 빈곤문제 해결에만 관여할 뿐 다른 모든 복지수요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자유민주적 복지국가 유형에 가깝다. 이러한 체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복지지출이 커지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산층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체제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서 오히려 중산층이 가장 두텁고 경제성장률도 자유민주적 복지국가에 비해 더 높다. 뿐만 아니라, 높은 복지비 부담 때문에 국민의 세금부담이 높지만 중산층도 복지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가장 낮다. 중산층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국가의 사회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2-3> 참조).

2) 정책수단 : 노동과 복지의 연계

중산층을 위한 복지는 전통적인 복지사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소득불균등 관점에서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이전이 주요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시대의 중산층은 근로능력과 근로의지는 있으나 일할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즉, 중산층을 위한 복지는 빈곤층과 같이 단순 소득이전을 통한 생활보장보다는 노동을 장려하고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대의 사회안전망이다.

앞서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실업률과 임시직 일자리 등 노동시장 관련변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문조사에서도 중산층이 원하는 것은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보다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적극적인 노동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서도 경기악화로 인한 실직과 사업실패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개혁 사례가 시사점을 준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유형인 북유럽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노인, 장애인, 실업자, 다자녀가구, 저소득층에게 이전소득과 함께, 건강, 교육, 보육, 노인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도 자산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동시에 노동과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복지개혁을 통해 노동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즉,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상태로 접어들면서 소득이전 방식의 복지혜택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노동과 직업교육을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복

지개혁을 실시하였다(Jeong Taik Lee, 2009).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패러다임은 중산층을 사회안전망 테두리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중산층이 복지혜택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산층에게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수원(稅收源)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2.

1) 기본체계

(1)

중산층 위기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중산층의 유지·복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중산층 종합대책의 목표는 크게 2가지로, 1)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탈락하지 않고 중산층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중산층 탈락방지 또는 유지”가 하나이고, 2)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탈락한 계층이 재기하여 중산층으로 재진입하고 보다 안정적인 핵심중산층으로 상향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탈빈곤 또는 중산층 복원”이 다른 하나이다.

중산층 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 또는 Wolfson지수)를 주기적으로 추정하여, 중산층의 붕괴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정책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동안 소득불균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여러 기관에서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소득양극화 지수 특히 서울시 단위의 지수는 발표된 바가 없다.

(2) :

중산층의 유지·복원은 사회복지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이 경기침체에서 비롯되었고, 그 영향은 가족문제에서부터 사회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산층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분야는 경제, 노동, 교육, 사회, 복지 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우선 현재 중산층의 붕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은 중산층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경제정책 가운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산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

는 고용정책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정책에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산층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역량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평생직장개념이 사라지는 현재 상황에서 직업훈련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 중산층이 당면한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수입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족, 부채증가, 채납·채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여기에 사교육비와 주거비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중산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중 사교육비와 집값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높으며,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주거비 부담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의 재기·자활에 장애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도 중요한 분야이다. 중산층의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시작되지만,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서비스 욕구로 연결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이유로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이혼한 사례도 있고, 고령가구가 많은 중하계층에서는 병원이용까지 자제하는 문제까지 생기고 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후 사회적 네트워크도 약해지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중산층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사회·문화생활 향유기회도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 유지·복원을 위해서는 경기회복이라는 거시경제정책의 바탕 위에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정책, 고용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정책과 지원, 그리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처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단순히 사회복지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행정영역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이 다양한 행정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우선 각각의 행정영역을 포괄하는 중산층 지원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이미 관련부처 합동으로 중산층 종합대책인 휴먼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산층 문제를 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여 종합적 대응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중산층 대책은 다양한 정책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총괄

헤드쿼터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휴먼뉴딜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산층 대책은 복지업무보다는 고용·교육분야 업무가 핵심이고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시장실 직속 TF팀을 구성하거나 서울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와의 협조·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2) 핵심과제

(1)

서울시 소득양극화 결정요인 분석에서 경기 변수 등의 제반 변수보다 노동시장 변수가 소득양극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임시직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득양극화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와 같은 고실업 상황에서의 소득양극화 대책은 실업률을 낮추는 경기 대응책의 적극적인 실시이다.

2008년 4/4분기 기준 서울의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는 0.0259로 전국의 ER지수 0.0255를 상회하고 있다. 결정모형에 따르면 실업률이 1% 감소하면 소득양극화 지수는 0.4% 감소한다. 따라서 서울의 양극화 지수를 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0.004 포인트를 낮추어야 한다. 이는 2009년 9월 현재 실업률 4.3%를 4.09%까지 낮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국단위 분석과 달리 서울의 소득양극화 결정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소득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실업률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 경제활성화가 기본전제가 된다. 한국의 소득양극화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해체되면서 심화되었으며, 작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3년 내수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실업률을 4.09%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선결과제이다.

(2)

2009년 초에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 외로 빠르고 최악의 고용상황이 예견되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인 28조원의 슈퍼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빈곤층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슈퍼추경예산 중 상당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와 공공부문의 인턴, 희망근로 사업

등에 투입되었다. 희망근로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부문에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양극화 결정모형에서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희망근로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실제로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으로 실업자가 2009년 3월 952천명에서 2009년 4월 932천명으로 감소하여 단기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임시직 일자리는 여성, 고령자, 저학력 계층 등 근로빈곤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 생활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단기간에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위기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윤형호, 2009.6).

그러나 임시직 일자리가 소득양극화 완화에 기여한다고 해서 이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현재 중산층 붕괴의 원인으로 기업 또는 산업 간 고용 및 임금격차가 지적되고 있다. 경쟁력 높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도태되었고, 그 결과 중산층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 중산층 몰락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간소득 일자리는 감소하고 상위, 하위 일자리는 증가하는 U자 형태로 고용구조가 변화하였고, 이는 곧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6). 제조업 분야에서 고임금 대기업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저임금 중소기업 고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서비스업 분야도 저임금부문의 고용비중이 높고 고임금분야의 고용비중은 낮아진다.

따라서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하계층을 위한 임시직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도의 기술발전으로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의 경기활성화와 녹색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서비스 등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다.

(3)

중산층 복지는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교육, 훈련 등 광범위한 사회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 훈련을 동반한 고용정책이다. 세계화와 경제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평생직장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모

든 계층에서 전업과 재취업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중산층 대책에 있어서도 언제라도 전업, 재취업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도록 평생직업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서울시의 직업훈련 실태에 따르면 시립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연간 3,500 여명을 배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 준고령자, 실업자 대상의 훈련이 전부이고, 그 실적도 모두 합쳐 연간 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의 직업훈련은 양적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사업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한 “복지사업”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산층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산층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교육·훈련은 복지업무가 아니라 교육행정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주어졌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취미·여가교실과 같은 사회교육이 중심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로 직업교육이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울시 차원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학습과 일, 그리고 생활이 연속성 있게 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교육기획관을 중심으로 복지국, 산업국, 여성부서, 자치구 등으로 분산된 평생직업교육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제공과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가칭 “서울 HRD-Net”을 구축하여 노동부의 Work-Net과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이혜숙, 2007). 특히 중산층의 빈곤탈락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전직(轉職)자와 이직(移職)자뿐 아니라, 재직(在職)자를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평생직업능력을 보존·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수강료 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도 서울시의 과제이다.

미래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북유럽의 사회민주적 국가의 사례에 따르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체제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안전성도 확대시킨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은 노동과 교육이 보장되고 노동시장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는 단기적으로 전 국민이 생산에 기여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안상훈,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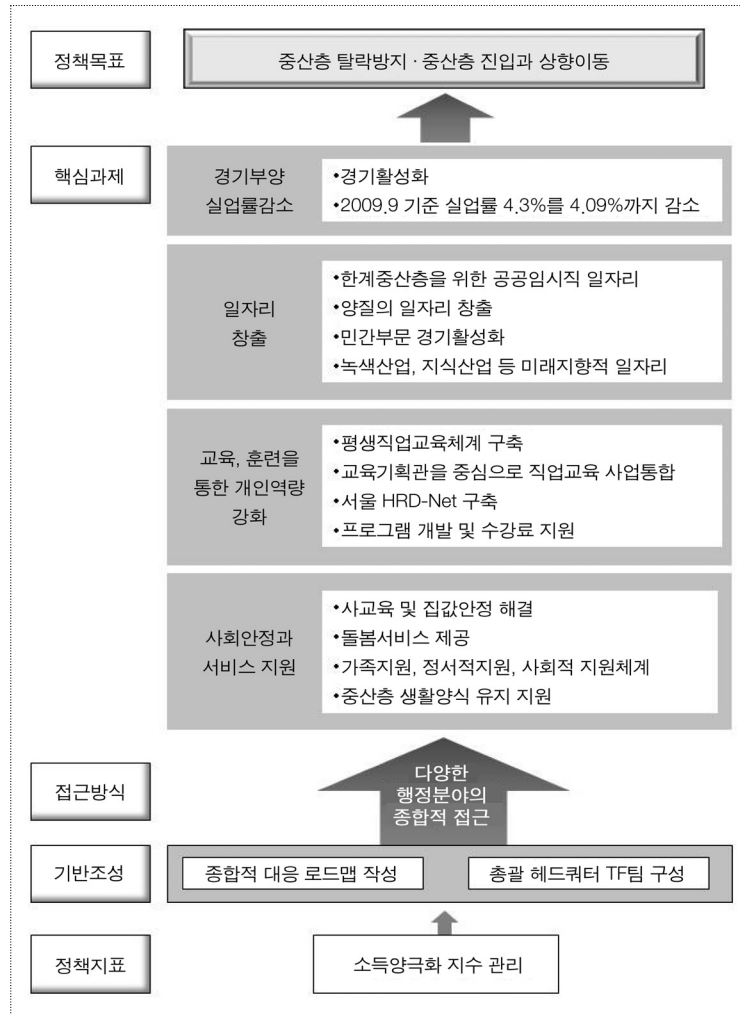
(4)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 위기상황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이는 가정해체, 건강, 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접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

우선 설문조사에서 중산층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사교육비 문제와 주거안정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교육이나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중산층 대책이 된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경제위기 이후 가족 간 불화, 이혼,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자녀 또는 노부모 등 부양가족 문제가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지적되었다.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외식이나 여가문화생활, 사회활동 등을 줄임으로써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자녀 또는 노부모 등 부양부담을 사회화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가족지원, 정서적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사회안전망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외식비, 여가문화비 등을 줄인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변화이다. 여가문화는 상대적으로 필수적인 지출항목은 아니지만, 중산층으로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아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중산층 종합대책의 구성체계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 6-1>과 같다. 서울시는 중산층 탈락방지와 중산층 진입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소득양극화 지수를 정책지표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행정분야의 종합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 6-1>

3.

1) 접근방법의 차별화

이 연구의 조사결과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에서 중산층 내에서도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월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중상계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 반면, 중하계층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한계중산층에 해당하는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 가구가 가장 고위험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이나 가족문제에 있어서도 상대

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70%로 정의되는 한계중산층을 실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1,386~1,940천원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9년 최저생계비는 3인 가구 1,081천원, 4인 가구 1,327천원이다. 즉, 한계중산층은 일반적 개념의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집단으로 근로빈곤층에 가깝다. 실제로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 한계중산층은 근로빈곤층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가구주의 취업직종이 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49.3%에 달한다. 또한 여성가구주가 20%이고, 대졸 이상이 19.5%로 월소득 400~450만원 집단의 71.9%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중산층 내에서도 핵심중산층과 한계중산층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구분	정책목표	정책과제
중산층	핵심중산층	중산층 탈락방지	고용유지
	한계중산층	중산층 탈락방지 상향이동	고용창출 교육,훈련 가계부담 경감
빈곤층	근로빈곤층	탈빈곤 중산층 진입	
	절대빈곤층	기초생계 보장	공공부조

< 6-2>

핵심중산층은 비교적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고, 고용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여 안정적 중산층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핵심중산층의 경우, 전체적인 경기회복과 개인의 역량을 보존하고 강화하여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반면에 한계중산층을 위한 정책목표는 빈곤층으로의 탈락방지와 함께 좀 더 안정적인 핵심중산층으로 상향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계중산층은 현재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교육과 기술수준이 낮아 고용조건이 열악하고 실업상태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계중산층 대상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주거비, 사교육비 등의 가계

부담이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조사에서 자녀의 교육비가 큰 부담으로 조사되었고, 동시에 자녀나 노부모 등 부양가족 문제도 자활·자립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게는 가계부담 경감과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2) 한계중산층 지원방안

(1)

교육과 기술수준이 낮은 한계중산층에게는 취업보다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지원방안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서울시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의의가 있다. 특히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중앙정부의 사업들과는 달리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사업대상을 최저생계비 150%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1,081,186원)를 기준으로 할 때, 수혜대상 기준인 최저생계비 150%는 1,621,779원이다. 이는 여전히 서울시 중위소득(2,772천원)의 58.5%로,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은 극히 일부만 참여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당수의 계층이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 희망드림 프로젝트에 대한 이용욕구가 높은 편이다. 특히 한계중산층에서 이용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계중산층은 근로빈곤층 성격을 띠고 있다. 희망드림 프로젝트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중산층, 즉 중위소득의 70%까지는 수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081,186원의 179%에 해당된다. 따라서 희망드림프로젝트의 사업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 한계중산층의 주요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드림 बैं크, 꿈나래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각각 24.3%, 17.8%, 17.3%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다(<표 4-37> 참조). 이용요구율을 서울시 전체 가구수에 적용하면 한계중산층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2008년말 서울의 전체 세대수는 4,098,562세대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서울시 데이터에서 한계중산층인 중위소득 50~70%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비는 11.07%이다. 이를 희망드림 프로젝트 이용희망률에 적용하면, 사업별 한계중산층의 잠재적 수요는 <표 6-1>과 같다.

< 6-1>

(:가 , %)

	가				
			가		가
	4,098,562	11.07	453,711	24.3	110,251
				17.8	80,760
				17.3	78,492

: 가 2008 .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요구는 실수요(demand)라기보다는 단순 희망(want)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희망률의 절반만 실수요라고 가정하더라도 잠재적 수요규모는 상당하다. 그러나 2009, 2010년도 주요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계획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6-2>

(:가)

	2009	2010
	1,500	2,000
	11,040	12,100
	3,000	4,000

:

(2)

직업교육·훈련의 강화를 통한 개인역량의 강화는 모든 중산층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한계중산층은 학력과 기술이 낮기 때문에 특히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계중산층은 저임금의 임시직,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핵심중산층으로 상향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재취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계중산층의 직업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한계중산층의 경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재직자들도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인 한계중산층은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훈련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간 동안은 기초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3) 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에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주거비 부담, 고령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 등도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제약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전체에서 이러한 기초생활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 특히 한계중산층 집단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빈곤층으로 탈락하는 원인이 되거나 재기·재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중산층 지원대책은 소득이전과 같은 직접적 지원보다 노동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계중산층은 근로빈곤층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하는 가계부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조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이용을 미룬다거나 자녀의 학업을 중단하는 문제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고령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 가정 자녀의 교육비·보육비 지원,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 지원 등은 한계중산층의 빈곤예방과 탈빈곤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보육비 지원과 저소득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미래 중산층을 키우기 위한 인적자원 투자수단이다.

제2절 결어

1.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은 붕괴되고 소득양극화는 악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양극화 지수를 통해 중산층 붕괴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중산층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소득양극화 지수 추정에 있어서 제3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가구동향조사 데이터가 2003년을 기준으로 소득조사 대상이 근로자 가구에서 전 가구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지수가 2003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동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득양극화 지수는 여전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한계는 설문조사 대상의 문제이다. 조사설계 과정에서 조사대상 모집단을 전체 서울시민으로 확대할 경우 이 연구의 주 관심대상인 중산층 표본수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소득기준으로 현재 중산층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조사내용이 주로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에 초점에 주어진 반면, 조사대상은 현재 중산층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탈락한 계층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직상태로 전락하거나 고용조건이 악화된 사례가 많지 않게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례의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이 경제적 위기가 시작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였고 작년 금융위기로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결국 중산층의 위기는 외환위기부터 시작되었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중산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 국가가 어떠한 복지체제를 갖느냐 하는 문제는 재분배 기제일 뿐 아니라 사회계층화 기제이기도 하다.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체제보다 공공부조와 함께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체제에서 중산층이 더 튼튼하고 경제·사회적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복지기능을 확대하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 조세저항이 커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주장과는 달리, 사회지출이 더 많고 복지수혜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사회서비스 통합형 국가에서 오히려 경제 및 사회적 성과가 모두 우수하고, 중산층 비중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동시에 노동활동에 필요한 보육서비스, 교육보장, 노동시장 안전장치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전 국민이 생산 활동에 기여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교육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서비스형 복지체제에서 최대 복지수혜자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낮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상훈, 2008).

그러나 이러한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은 복지분야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산층을 위한 대책은 노동과 교육이 핵심 분야이고, 여기에 사회분야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중산층 대책은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복지체계의 방향성을 선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세계화 경향,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 도입, 글로벌 경기침체 등 거시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해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도 중산층의 빈곤예방,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부양, 실업률 상승, 노동시장 문제 등 거시적인 접근이 우선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보편적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용, 교육,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한데, 사회안전망 체계 중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담당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도 시차원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산층 대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

-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
- 김미곤, 2009,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기본방향”, 『보건복지포럼』, 제14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균 외, 2005,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 김영란, 2005, “한국의 신빈곤형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7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용성, 2006, 『소득분배 양극화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김태성·성경룡, 2000,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 김호기, 2008, “중산층과 이중적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편), 『기로에 선 중산층 -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남준우, 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규모 및 소득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제7권, 한국노동연구원.
- 문숙재 외, 2000, 『한국 중산층의 생활문화』, 집문당.
- 박순일, 2005, “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보건복지포럼』, 통권 10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2006,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 _____, 2009,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5, “서울시 양극화 대책”, 미발간자료.
- 서울특별시, 2005, 『2005 예산개요』.
- _____, 2009, 『2009 성과계획서』.
- 신광영, 2008,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해법인가,” 한국사회학회(편), 『기로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_____,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 신동균, 2008,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신동면, 2006,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이론』, 제29권, 한국사회이론학회.
- 안상훈, 2008, “유럽의 복지국가와 중산층, 한국에의 교훈”,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7-01, 한국개발연구원.
- 유경준·최바울, 2008.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제2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 윤형호, 2009.6, “서울시 일자리 창출 방향과 전략—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경제』, 통권 51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_____, 2009.6, “미래지향적 서울시 신일자리 창출 전략”, SDI 정책리포트 제40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재열, 2008, “한국의 사회통합과 중산층 육성의 과제”,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이혜숙, 2007, 『미래사회 대응 서울시 교육체제 구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_____, 2009,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장미혜, 2008,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정부 관계부처합동, 2009,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미래기획위원회 4차회의 보고자료.
- 조동기, 2008,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통계청, 2008.10,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 한국개발연구원, 2006.8,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
- 홍경준, 2005,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을 위한 현실진단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8, “한국의 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홍석표, 2003,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대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찰”,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석표 외, 2003,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Esteban, J. and D.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 62.

Granger, C, 1969,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Vol. 37, No. 3(July), pp.424-438.

Hendry, D. F., 1995, *Dynamic Econometrics*, Oxford University Press.

Krolzig, Hans-Martin, 2003, “General to Specific Model Selection Procedures fo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 Statistics*, Vol. 65, s1, pp.769-801.

Lee, Jeong Taik, 2009.8, “Scandinavian Social Safety Net Reform Initiative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세미나 및 하계학술대회논문집『지방자치단체의 사회안전망과 문화마케팅 선진화 방안』.

OECD, 2009, “OECD Factbook 2009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

경향신문, 2005.10.5

중앙일보, 2008.12.15

세계일보, 2009.6.18

매일경제, 2008.9.16

한겨레21, 2009.10.19

부 록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패널홈 panel.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ID AI-5

Gallup 200916048

서울시민 생활변화 및 욕구조사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생활변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의 생활변화와 복지욕구에 대한 의견조사로 선생님의 적극적인 답변은 향후 서울시의 정책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창의시정연구본부 서은정(02-2149-1274)

2009년 6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무익
 담당연구원 권수연
 실시연구원 손연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685

- 지 역(구) : 01. 종로구 02. 중구 03. 용산구 04. 성동구 05. 광진구
 06. 동대문구 07. 중랑구 08. 성북구 0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 지 역(동) : _____

SQ1) 귀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입니까?

1. 예 → **조사종료**
 2. 아니오 → **SQ2로 갈 것**

SQ2) ((SQ1에서 1번 응답자만)
 11 귀댁의 한 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가구원의 소득, 이자나 임대료 수입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 150만원 미만 → **조사종료**
 2.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본조사 진행**
 3. 30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 **본조사 진행**
 4. 450만원 초과 → **조사종료**

■ 이 조사는 이 댁의 가구주가 응답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만 배우자가 응답해주시요. 가구주는 이 댁의 생활비를 주로 벌고 있는 분을 말합니다.

SQ3) 응답자 구분 :

- 12-13 1. 가구주 2. 배우자 3. 기타(적을 것: _____)

SQ4) 응답자 성별 : 1. 남자 2. 여자

14 SQ5)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5-16 만 _____세

I. 가구 및 주거상황

문1) 현재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17-18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있는 가족도 포함)

_____명

문2) 귀댁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 19 1. 있다 2. 없다 → **문3으로 갈 것**

[보기카드 1 제시]

문2-1) ((문2에서 1번 응답자만)

20-21 그럼, 방과 후 초등학생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니까?

1. 부모
 2. 함께 사는 다른 가족
 3. 따로 사는 친인척
 4. 이웃에서 돌봐줌
 5. 학원에 감
 6. 지역아동센터/공부방
 7. 집에서 혼자 보냄
 8. 기타(적을 것: _____)

문3) 귀댁에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까?

22

1. 있다 2. 없다 → **문4)로 갈 것**

[보기카드 2 제시]

문3-1) ((문3)에서 1번 응답자만)

23-24

그럼, 미취학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니까?

(오전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보내는 경우, 귀가 후 시간만 해당)

1. 부모
2. 함께 사는 다른 가족
3. 따로 사는 친인척
4. 이웃에서 돌봐줌
5.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6. 지역아동센터/공부방
7. 집에서 혼자 보냄
8. 기타(적을 것: _____)

문4) 귀댁 가구주의 개인특성을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구 분	내 용	
㉠ 성별	1. 남자 2. 여자	25
㉡ 연령	만 _____ 세	26-27
㉢ 혼인상태	1. 기혼(유배우) 2. 사별 3. 이혼/별거 4. 미혼	28
㉣ 학력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대학이상 졸업 *중되는 아래 학력으로 기록 (예: 대학중퇴-->고등학교졸업)	29
㉤ 건강상태	1. 신체적 장애 있음 2. 만성질환 있음 3. 건강함 *신체장애와 만성질환 중복응답 가능	30 31 32

문5)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33-34

1. 단독주택
2. 아파트(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3.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빌라
4. 상가내 주택
5. 기타(적을 것: _____)

문6) 소유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35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 월세
4. 월세/사글세
5. 무상

문7) 살고 있는 집은 몇 ㎡입니까?

36-40

□□□□.□□ m² (1평=3.3m²)

문8)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9월 이후) 귀댁의 주거상황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41

1. 변화없다 → **문9)로 갈 것**
2. 더 좋아졌다
3. 더 나빠졌다

[보기카드 3 제시]

문8-1) ((문8)에서 3번 응답자만)

그럼, 주거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42 1. 자가에서 전세로 옮겼다
- 43 2. 자가에서 월세/사글세로 옮겼다
- 44 3. 전세에서 월세/사글세로 옮겼다
- 45 4. 살던 집의 평수를 줄였다
- 46 5.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했다
- 47 6. 살던 집의 일부를 임대 주었다
- 48-49 7. 기타(적을 것: _____)

II. 경제활동

문9) 귀댁의 가구주께서는 현재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50

1. 한다 → **문10, 10-1)로 갈 것**
2. 안한다 → **문11~12)로 갈 것**

문10) ((문9)에서 1번 응답자만)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구 분	내 용	
㉠ 직종	1. 전문관리직 2. 일반사무직 3. 판매·서비스직 4. 기능생산직 5. 단순노무직	51
㉡ 고용형태	1. 임금봉급근로자 → ㉢-㉤로 갈 것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 ㉢로 갈 것 4. 무급가족종사자	52
㉢ 정규직 여부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정규직 2. 비정규직	53
㉣ 취업형태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54
㉤ 근로시간 형태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전일제 2. 시간제	55
㉥ 한달평균 수입	월 평균 _____ 만원	56-59

문10-1) (문9에서 1번 응답자만)

문10 ㉠ ㉡의 항목들 중에서 지난해 금융위기 이전
(9월 이전)과 비교해서 변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이전에 하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구 분	변화여부		이 전 내 용	
	있다	없다		
㉠ 직종	1	2	1. 전문관리직 2. 일반사무직 3. 판매·서비스직 4. 기능생산직 5. 단순노무직	60
㉡ 고용형태	1	2	1. 임금봉급근로자 → ㉢~㉤로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 ㉥로 4. 무급가족종사자 ㉦	62
㉢ 정규직 여부	1	2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정규직 2. 비정규직	64
㉣ 취업형태	1	2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66
㉤ 근로시간 형태	1	2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전일제 2. 시간제	68
㉥ 한달평균 수입	1	2	월 평균 _____만원	70-72

☞ 문13)으로 이동

[보기카드 4 제시]

문11) (문9에서 2번 응답자만)

73-74 그럼, 귀댁의 가구주께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직장 또는 본인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
2. 정리해고
3. 권고사직, 명예퇴직
4. 정년퇴직
5. 계약기간이 끝나서
6.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안되서)
7.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8.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9. 적성, 지식, 기능 등에 맞지 않아서
10.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1.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12. 자기(또는 가족) 사업을 새로 해보려고
13. 결혼, 출산, 육아, 가족간병 등 가사 문제로
14.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15. 기타(적을 것 : _____)

문11-1) (문9에서 2번 응답자만)

그럼, 언제부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_____년 _____월부터 현재까지
75-78 79-80

문11-2) (문9에서 2번 응답자만)

그럼, 이전에 하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구 분	내 용	
㉠ 직종	1. 전문관리직 2. 일반사무직 3. 판매·서비스직 4. 기능생산직 5. 단순노무직	81
㉡ 고용형태	1. 임금봉급근로자 → ㉢~㉤로 갈 것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 ㉥로 갈 것 4. 무급가족종사자 ㉦	82
㉢ 정규직 여부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정규직 2. 비정규직	83
㉣ 취업형태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84
㉤ 근로시간 형태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전일제 2. 시간제	85
㉥ 한달평균 수입	월 평균 _____만원	86-88

문12) (문9에서 2번 응답자만)

89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1. 예 → 문12-1, 12-2로 갈 것
2. 아니요 → 문13)으로 갈 것

문12-1) (문12에서 1번 응답자만)

90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1. 창업하고 싶다
2. 취직하고 싶다

문12-2) (문12에서 1번 응답자만)

어떤 방법으로 창업이나 취업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91 1. 고용안정센터, 취업정보센터
- 92 2. 민간직업소개소
- 93 3. 동사무소, 구청을 통해서
- 94 4. 친지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 95 5. 정보지/신문구인광고
- 96 6. 인터넷
- 97-98 7. 기타(적을 것 : _____)
98. 마땅히 알아볼 곳이 없다

문13) 귀책 가구주의 배우자께서는 현재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까?

B6

1. 한다 → **문14, 14-1)로 갈 것**
2. 안한다 → **문15)로 갈 것**
3. 배우자 없음 → **문16)으로 갈 것**

문14) (문13)에서 1번 응답자만
그럼,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구 분	내 용	
직종	1. 전문관리직 2. 일반사무직 3. 판매·서비스직 4. 기능생산직 5. 단순노무직	7
고용형태	1. 임금종급근로자 → ㉠-㉡로 갈 것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ㄱ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ㄷ → ㉢로 갈 것 4. 무급가족종사자 ㄴ	8
정규직 여부	*임금종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정규직 2. 비정규직	9
취업형태	*임금종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10
근로시간 형태	*임금종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전일제 2. 시간제	11
한달평균 수입	월 평균 _____ 만원	12-14

문14-1) (문13)에서 1번 응답자만
이 일은 지난 해 금융위기 이후(9월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입니까?

15

1. 예 2. 아니오 → **문15)로 갈 것**

▼ **[보기카드 5 제시]**

문14-2) (문14-1)에서 1번 응답자만
그럼, 일을 새로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6-17

1. 가장의 실직 또는 사업실패
2. 가장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3.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자녀 교육비를 보충하려고
4.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보태려고
5. 부채를 갚기 위해서
6. 자기개발,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7. 가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8.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6)으로 이동**

문15) (문13)에서 2번 응답자만

18

그럼, 귀책 가구주의 배우자께서는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1. 예 → **문15-1, 15-2)로 갈 것**
2. 아니오 → **문16)으로 갈 것**

문15-1) (문15)에서 1번 응답자만

19

그럼,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1. 창업하고 싶다 2. 취직하고 싶다

[보기카드 5 제시]

문15-2) (문15)에서 1번 응답자만

20-21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장의 실직 또는 사업실패
2. 가장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3.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자녀 교육비를 보충하려고
4.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보태려고
5. 부채를 갚기 위해서
6. 자기개발,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7. 가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8. 기타(적을 것 : _____)

[보기카드 6 제시]

문16)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9월 이후) 귀책에서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가구주	가구원
1) 부당해고, 정리해고	1 ²²	1 ²³
2) 명예퇴직, 희망퇴직	2 ²⁴	2 ²⁵
3)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 변화	3 ²⁶	3 ²⁷
4) 하던 사업(장사) 폐업	4 ²⁸	4 ²⁹
5) 일거리(일감, 손님) 줄어들	5 ³⁰	5 ³¹
6)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 감소	6 ³²	6 ³³
7) 임금체불(월급, 일당을 제때 못 받음)	7 ³⁴	7 ³⁵
8) 임금삭감 또는 동결	8 ³⁶	8 ³⁷
9) 퇴직금을 못 받음	9 ³⁸	9 ³⁹

III. 가구 경제상태

문17) 귀댁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모든 가구원의 수입,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액수를 포함하여 지난 3개월간 한달 평균 액수)

월 평균 _____만원

문18) 귀댁의 한달 평균 수입 중에서 이자나 임대료, 배당금 수입과 같은 자산수입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_____만원

문19) 지난 해 금융위기 이후(9월 이후) 귀댁의 한달 평균 수입에 변화가 있습니까?

1. 변화없다 2. 증가했다 3. 감소했다

[보기카드 7 제시]

문20) 귀댁의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가구주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2. 배우자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3. 기타 가구원 근로 또는 사업소득
4. 이자, 임대료, 배당금 등 자산소득
5. 연금, 퇴직금
6. 따로 사는 가족·친지의 도움
7. 정부지원금
8. 교회, 사회단체 지원금
9. 빚, 저금해약
10. 기타(적을 것 : _____)

문21) 저축하는 돈을 제외하고 식비, 교육비, 집세, 각종 세금 등 귀댁에서 지출하는 생활비는 한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유·거비, 관공상제 등 특별지출은 제외한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지출액)

월 평균 _____만원

[보기카드 8 제시]

문22) 귀댁에서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중이 큰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식료품비(외식비 제외)
2. 외식비
3. 피복비
4. 주거비(월세, 임대료)
5. 공교육비
6. 사교육비
7. 의료비
8. 여가, 문화비
9.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10. 통신비
11. 내구재(전자제품, 가구 등) 구입비
12. 가족들의 용돈
13.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14. 부채상환(주택구입 대출비 상환)
15. 기타(적을 것 : _____)

문23) 지난 해 금융위기 이후(9월 이후) 귀댁의 한달 평균 생활비 지출을 줄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24로 갈 것

[보기카드 8 제시]

문23-1) (문23에서 1번 응답자만) 생활비 지출을 줄인 항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줄인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식료품비(외식비 제외)
2. 외식비
3. 피복비
4. 주거비(월세, 임대료)
5. 공교육비
6. 사교육비
7. 의료비
8. 여가, 문화비
9.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10. 통신비
11. 내구재(전자제품, 가구 등) 구입비
12. 가족들의 용돈
13.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14. 부채상환(주택구입 대출비 상환)
15. 기타(적을 것 : _____)

문24)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9월 이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25로 갈 것

[보기카드 9 제시]

문24-1) (문24에서 1번 응답자만) 그럼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
2. 현금서비스 이용
3. 친지에게 빌림(나중에 갚아야 함)
4. 가족, 친지의 도움을 받음(갚지 않아도 됨)
5. 사채이용
6. 갖고 있는 부동산의 매각이나 임대료 인상
7. 살고있던 집이나 가게를 줄임
8. 저축, 보험, 개인연금 등 해약
9. 주식이나 채권 등 매각
10. 자동차, 귀중품 등 매각
11. 기타(적을 것 : _____)

문25) 귀하는 노후대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해당여부	
	있다	없다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1	2
2) 개인연금	1	2
3) 퇴직금	1	2
4) 저금, 보험 등 금융자산 마련	1	2
5) 주식, 채권	1	2
6) 현재 살고 있는 집	1	2
7)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	1	2

V. 생활행태 및 인식

다음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9월 이후) 귀댁의 생활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26-1) 채납·채불 경험

구 분	경험여부 있다 없다	
1) 월세/임대료/관리비 등을 밀린 적이 있다	1 2	6
2) 세금/공과금/이자 등을 밀린 적이 있다	1 2	7
3) 학비(또는 학원비)를 밀린 적이 있다	1 2	8
4)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생겼다	1 2	9

문26-2) 기초생활 제약 경험

구 분	경험여부 있다 없다	
1)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한 가족이 있다	1 2	10
2)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출산을 연기(또는 포기)했다	1 2	11
3) 경제적 이유로 병원이용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	1 2	12

문26-3) 사회·문화생활 변화

구 분	경험여부 있다 없다	
1)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더 저렴한 곳으로 간다	1 2	13
2) 문화생활, 취미생활을 이전보다 적게 한다	1 2	14
3) 주말이나 휴가여행을 줄였다	1 2	15
4)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한다	1 2	16
5) 모임이나 단체에 나가는 횟수를 줄였다	1 2	17

문26-4) 가족생활 변화

구 분	경험여부 있다 없다	
1) 가족 간 대화가 줄었다	1 2	18
2) 이전보다 가족 간에 자주 다툰다	1 2	19
3)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	1 2	20
4) 가족 중 가출한 사람이 있다	1 2	21
5)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1 2	22

문27) 귀하는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24

- 수입감소
- 가장의 실직
- 가족 불화
- 가족의 건강이 나빠짐
- 가족들의 자신감 상실
- 생활 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못함
- 기타(적을 것 : _____)

98. 없음

문28) 귀하는 걱정거리가 생기면 주로 누구와 이야기하고 상의합니까?

25-26

- 배우자
- 부모, 형제
- 기타 친인척
- 친구, 동료
- 이웃
- 전문상담가
- 종교인
- 기타(적을 것 : _____)

98. 없음

문29) 귀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27-28

- 부모, 형제
- 기타 친인척
- 친구, 동료
- 이웃
- 회사
- 정부
- 기타(적을 것 : _____)

98. 없음

문30) 귀하는 현재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가족은 현재 사람답게 살고 있다	1	2	3	4	5	29
2) 우리 가족은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30
3) 현재 생활에 대하여 만족한다	1	2	3	4	5	31

문31) 귀하는 향후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와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1	2	3	4	5	32
2) 미래의 나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33
3)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것이다	1	2	3	4	5	34

문32) 서울에 살고 있는 가구를 5개의 계층으로 구분한다면, 귀책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상	중상	중중	중하	하
1) IMF 이전	1	2	3	4	5
2) IMF 이후~금융위기 이전	1	2	3	4	5
3) 현재	1	2	3	4	5

VI. 복지육구 및 정책

다음은 어려운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인지도, 이용희망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33-1) 취업/창업지원

구 분	인지도			이용희망	
	매우 잘 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있다	없다
1) 고용안정센터, 취업정보센터	1	2	3	1	2
2) 직업훈련/기술교육 실시	1	2	3	1	2
3) 희망근로/자활근로 사업	1	2	3	1	2
4) 사업자금 융자	1	2	3	1	2

문33-2) 가족지원

구 분	인지도			이용희망	
	매우 잘 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있다	없다
1) 가정문제상담	1	2	3	1	2
2) 한부모가정 지원	1	2	3	1	2
3)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사업	1	2	3	1	2
4) 아동 일시보호 서비스	1	2	3	1	2
5)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비, 보육비 보조	1	2	3	1	2

문33-3) 서울시 희망드림 프로젝트

구 분	인지도			이용희망	
	매우 잘 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있다	없다
1)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1	2	3	1	2
2) 서울 희망드림 뱅크	1	2	3	1	2
3) 꿈나래 통장	1	2	3	1	2
4)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	1	2	3	1	2

[보기카드 10 제시]

문34)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귀하는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1) 경기부양	1	2	3	4	5
2) 일자리 창출	1	2	3	4	5
3)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	1	2	3	4	5
4)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1	2	3	4	5
5) 창업자금 지원	1	2	3	4	5
6) 창업정보, 기술지원	1	2	3	4	5
7) 경제적 지원(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보조)	1	2	3	4	5
8)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1	2	3	4	5
9) 집값 안정	1	2	3	4	5
10) 사교육 문제 해결	1	2	3	4	5
11) 가족문제, 부부문제 상담·교육 등 가정해체 예방사업	1	2	3	4	5
12) 한부모가정/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돌봄서비스	1	2	3	4	5
13) 아동보육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1	2	3	4	5
14)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교육	1	2	3	4	5
15) 여가 문화생활 지원	1	2	3	4	5
16)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1	2	3	4	5
17) 기타(적을 것: _____)					

[보기카드 10 제시]

문35) [문34]에 제시된 항목 중 현재 귀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82-83	84-85	86-87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연락처	() - () - ()		
조 사 일 시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면접원 이름		ID	88-92

Supervisor	검 증 원
93-94	

영 문 요 약
(Abstract)



Welfare Paradigm and Policy Agenda in the Time of Middle Class Crisis

Kyung-Hye Kim · Dal-Ho Cho · Eun-Cheol Park · Eun-Jung Seo

Due to global economic recession, the number of middle class people has been reduced and they are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The proportion of the middle income class of Seoul declined from 67.8% in 2000 to 59.4% in 2008. The income polarization index of Seoul shows the increasing disparity that exceeds the level of national average. The social safety net, however, concentrates on income transfer scheme to the poor, neglecting the middle class. This report aims to propose the new direction of welfare paradigm and policy issues under this emerging circumstance of middle class people.

Esteban and Ray index of Seoul, one of the income polarization indexes, increased from 0.0207 in 2000 to 0.0259 in 2008. The critical factors affecting variation of Seoul's income polarization are found to be unemployment rate and ratio of temporary jobs. As unemployment rate increases by 1%, the index also increases by 0.4%; while 1% increase of ratio of temporary jobs results in 1.1% decrease of the index.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arget of social safety net to cover middle class. Under the universal welfare paradigm the middle class is most sound and stable. Unlike income transfer scheme to the poor, the best safety net for middle class is offering opportunity to work and training to develop their work ability. In a survey conducted for middle class households in Seoul, they put economic boosting and creating jobs in most important strategy for stabilizing middle class.

However, the survey also found economic difficulties result in social and cultural troubles as well. Some of them drop out of school, postpone marriage, and even give up medical treatment. Family trouble increases whereas social network is weakening. They call for public action to reduce the burden of expense for private tutoring and high price of housing. Therefore, social services to support middle class families and community should be linked to labor policy. In addition, economic assistance for education, housing, and medical treatment is considered necessary for marginal middle class people in order to prevent them falling to the lower class.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Research Outline
2.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Middle Class

Chapter 2 Review of Welfare Paradigm and Policy

1. Comparison of Welfare Paradigm by the Type of Welfare State
2. Social Safety Net in Seoul

Chapter 3 Income Polarization in Seoul

1. Change of Income Distribution
2. Determining Factors of Income Polarization

Chapter 4 Lifestyle and Welfare Needs of Seoul's Middle Class

1. Survey Outline
2. Results and Implications

Chapter 5 In-depth Interview of Marginal Middle Class

1. Interview Outline
2. Characteristics of Marginal Middle Class
3. Issues and Policy Response

Chapter 6 Conclusion

1. Policy Suggestion
2. Concluding Statement

References

Appendices

2009-SR-05

중산층 위기시대의 복지패러다임과 정책과제

정 문 건

2009년 9월 3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5,000원 ISBN 978-89-8052-686-4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